

제43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8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2.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2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2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2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2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2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2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2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2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2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2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2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2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2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2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2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2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2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10시05분)

○위원장 진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일 있을 조정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오늘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7개 기금 외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또 어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국회방송을 통해서 송출되지 않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해 가지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종합정책질의 산회 직전에 논란이 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의 명확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먼저 듣고 오늘 예정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부가 설명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진성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형수 위원 조은희 위원한테 이따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진성준 아니, 앉아 보세요. 일단 어저께 상황은 다 잘 아실 거고 오늘 정부 측의 설명을 분명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어제 있었던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 확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사업 중에 문제 제기가 된 사업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100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내 한국 직항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한국 지방 관광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개 각 중국 도시별로 10개 켜의 다양하고 특화된 한국지방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한 전세기 유치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안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에 문체부가 중국 관광객 5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지자체와 50% 매칭으로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역시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

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중국발 전세기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거지 일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은희 위원님께서서는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님이 문체부 실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 주시면서 정부 추경안에 중국 관광객 40만 원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은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처에 요구하여 협의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부 담당 사무관이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여행보조금을 문의하자 미반영된 과거 검토안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 사업에 대해 문체부가 40만 원을 지급할 의도를 가지고도 내역을 5만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예산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벗어난 집행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입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예산 설명자료 186쪽에 있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확대 신규 사업은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확정안이 본문 181쪽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추경안 내용에 더 이상 불필요한 문체부의 초기 요구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혼선을 초래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어젯밤에 제가 발언한 지방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내용과 조금 전 말씀드린 40만 원을 지원하는 지방공항 단체 모객 사업과는 무슨 관계인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관련 사업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추경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 논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어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어제 자세한 내용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진성준 정부의 설명과 같이 어제 문제가 되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한 사람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소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은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3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4분 주십시오, 조금 길어서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최휘영 문체부장관의 지금 소명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본 위원의 지적을 명확히 왜곡하고 부인

한 것에 대해서 또 최휘영 장관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국민을 속이는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첫째, 본 위원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을 지적했을 때 두 장관은 그런 예산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도 그러는데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정확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저를 취급하는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둘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추경안 공식 문서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지원액수를 숨겨 놓았으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문체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실에 제출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306억 원 중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 확대 신규 예산 100억 원, 지방비 매칭 100억 원은 빠져 있고요 국고 예산이 100억 원인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페이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에게 5만 원씩 주겠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니 뒤늦게 기획예산처와 논의 과정에서 달라졌을 텐데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처 빠지 못했다는 구구한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똑같은 자료 두 개를 쫓아오, 전세기 지원 100억 자료 그다음에 똑같은 자료 중에 전세기 지원 제외라는—괄호 붙이고—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관광상품 누가 주나요, 중국 관광객들? 중국 항공사, RTO, 중국여행사 OTA 등으로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중국 관광객들한테 1인당 40만 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셋째 40만 원 지원에 대한 의혹 제기, 앞서 언급한 내용에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국민 비난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용어만 바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 확대를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으로 단어 몇 개 바꾼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모호하게 변명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1분 더 드리세요.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40만 원씩 주기로 한 예산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라고 검토 후 작성한 자료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장관은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인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통합돌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됐지만, 발차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 돌봐야 되는 40~50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예산부터 우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26조가 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오십여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어젯밤부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은 그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토론을 이어 가는 것은 다른 중대한 예산에 대한 토론시간이 줄어들고 소홀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신 취지는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체위 예비심사에서 짐 캐리 예산 부분은 이미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 조정소위가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중국 관광객 유치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잘 고려해서 토론하고 또 조정소위 심의가 진행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당 간사로서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더 토론을 이어 나가고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장님,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정부 측 추가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진성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제 조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납득할 만한 내역 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거듭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예산실의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편성 실무를 맡았던—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봤고요. 또 거기를 통해서 문체부의 당시의 담당 과장, 사무관 통해서 다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문체부장관께서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위원장께서 추경사업의 내역에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것은 오해로 빚어진 것이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감 정도로 저는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의, 정부안의 어디에 지금 일인당 40만 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결위 심사, 종합정책질의 자리가 사실에 기초해서 서로, 설령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정부를 대표해서, 특히 주무부처의 장관까지 와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경심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알다시피 중화권, 중국하고 대만하고 홍콩 쪽에서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 목표보다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 설계에 있어서 직접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체부의 애초의 제안을 저희가 편성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다 반영을 하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적 성격……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이게 국회에 법적으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것 보시면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전세기 지원은 제외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20개 도시 10회, 5000만 원씩 이게 지금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이 뭐냐? 남도 맛집여행 프로그램, 예를 들면 프로야구와 연계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경주 관광상품. 이런 20개 도시에 각각, 우리 직항기가 없는 20개 도시에 각각 10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래서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은희 위원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추정편성안을 이렇게 부정하셔서야 국민적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것 전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까 우리 장관께서 얘기했던, 아마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이 법적 설명자료 말고 옛날 수정 전의 그 자료에 뭔가, 애초에 우리가 편성안을 만들기 전 즉 우리 기획처에다가 문체부에서 요구했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고, 아마 요구에서 그것을 붙여 줬던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인당 40만 원 지원, 결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 왜곡은 저희가 아니라 조은희 위원님이 하고 계신 거라 보여지고, 어제 찾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아낸 것 잘못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요, ‘문체부가 기획예산처를 속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 왜 계속 이걸 반복하시는 겁니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국무위원은 발언시간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얘기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사실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오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가만계세요, 가만.

기획예산처장관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오해는 해소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은희 위원 해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께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충실하게 설명하시고 납득 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받아 봤고 또 관계자를 불러서 소명도 직접 듣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 다른 것 할 게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성준 그만하시지요.

분명하게 다 얘기된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했잖아요!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진성준 앉아 계세요.

○박형수 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위원장 진성준 본질의 들어간 다음에……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한다고요!

○위원장 진성준 질의에 들어간 다음에도, 질의에 들어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고양시갑의 김성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게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해야 될 거 아니요!

(「질의하면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성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박형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해야 되는 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시작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성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앉아 계십시오.

○박형수 위원 지금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진성준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잠깐 앉으시고.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억 명이 찾는 국민들의 쉼터, 휴게소. 지난 연말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적인 휴게소 물가와 도로공사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신속 해결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과 연결되어 있는 휴게소 운영사의 심각한 불법행위 또 그로 인한 입점업체 점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게 돼서요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장관님, 그저께 한겨레21에 보도됐던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봤습니다.

○김성희 위원 운영사의 대금 체불로 휴게소 점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고 기흥·망양·충주 세 곳에서만 피해액이 28억 원에 달하는데 보도 전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보도 전에는 심각한 내부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년에는 입점업체 점주가 대금 체불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 내용에 보시면요, 버티다 못한 윤 씨가 도로공사에 팩스를 넣었는데 연락이 온 건 운영사였다는 겁니다. ‘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었느냐’라고 따지고 나서 윤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을 포함해서 8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된 이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5년 넘게 흘렀는데요, 이 악덕 운영사 대금 체불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요 입점업체 최소 열여섯 곳이 대금 체불, 여전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미지급금을 운영사가 축소 신고한다는 복수의 증언도 있었고요,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의원실에서 한 달 동안만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도로공사는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님 말씀이 있는 이후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3년도 국토부는 망양휴게소를 현장 조사했고 23년 내로 상환하겠다는 운영사의 공문까지 받았는데 피해 점주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금 체불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입점업체 점주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이런 업체들…… 지금 공적 자산인 휴게소를 운영하는 상황, 이것 지금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입점업체 점주들이 운영사가 납품거래 갑 지위를 이용해서 대금 체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요 전방위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보를 해 왔습니다.

납품거래와 별도로 바닥권리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빈 가게에 들어가는데 권리금을 내는 걸 바닥권리금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장사가 잘되는 가게에 들어가는 권리금은 우리가 내고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깡통에 들어가는데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걸 받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운영사 관계자에게 삼사백만 원의 뒷돈을 매달 지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납품거래 약정상 인테리어와 시설비는 운영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C업체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운영사에 청구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은 체불하지 추가적으로 금전은 요구하지, 카드로, 현금서비스 안 받아 본 대출이 없다라고 지금 점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관계자들은 처벌을 하고 해당 금액은 환수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 책임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대금 체불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입점업체 점주가 심지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도로공사는 2023년과 2024년에 알았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뻔뻔하게 공문을 보내는데요. 망자가 팩스로 2020년에 도로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 가지고 운영사가 전화해서 ‘도로공사에 팩스 넣었냐’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가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운영사에게만 알려 줬다라는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년 운영평가에 대해서 운영사가 회계자료를 열람도 하고 매달 휴게소 현장점검을 도로공사가 하고 있다는데 대금 체불을 수년간 파악 못 했다는 것은 안 했다, 알고도 그냥 있었다, 도로교통공사가 한통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심지어는 이 도로공사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납품대금 미지급한 문제를 조사한 이후인 2024년 11월에도 기흥·망향휴게소는 운영사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대로면 운영사 운영평가에서 문제의 운영사를 걸러 내야 되는데요, 중도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흥·망향 운영사는 대금 체불을 한 10년 동안 계약해지는커녕 단 한 번도 5등급을 받지 않았고 2024년도에도 재계약 최저등급인 3등급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에 제보 들어온 것 보니까요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도로공사가 특정 휴게소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 운영사에 문제가 있어도 3등급을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입맛대로 운영사랑 주물러서 운영평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성희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도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는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도로공사도 국토교통부도 다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지시를 하셔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살펴보라고 해도 도로공사가 내려가서 살펴본 다음에 ‘별문제가 없는데요’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실이 한 달 동안 점주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기자들이 현장 가서 취재해 보니까 이 휴게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알아본 데만

그런데 다른 데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이 휴게소 운영사에 사내이사 등으로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기사에 나온 바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하고 휴게소 운영사 사이에 검은 유착 관계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도로공사가 이것 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사관실에 매우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희 위원 장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지시를 하셨는데 그때 위 영터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온 곳이 지금 현재의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라는 점을 장관님께서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 보시지요.

이미 기사에도 언급됐습니다만 기흥·망향휴게소 운영사의 엄 회장이 2023년에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 씨에게 기흥 복합휴게소 적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최 씨가 ‘문제가 심각하네요’라고 해결해 주겠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후에 최은순 씨가 구속되면서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고 엄 회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언론사와 함께 취재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 휴게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 한두 명을 데리고 기자들하고 한 달 동안 파악해 본 내용이 이러면 전체 휴게소가 어떨지는 정말 불 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이때까지 문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무능이고요, 알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면 운영사·도로교통공사·국토부가 모두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장관님, 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아시지요? 동네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보호비니 통행세니 돈을 뜯고 다니고 부패경찰이 그 뒤를 봐주었던 공존·공생의 구조였던 겁니다. 돈을 뜯긴 가게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돈을 벌충하려고 물건의 값을 올리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동네 깡패도 부패 경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랑 운영사는 여지껏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런 데가 몇 군데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성희 위원 왜 4억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게소를 이용하면서 도로교통공사 전관들의 퇴직 후의 임금까지, 뒷돈까지 다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장관께서 책임을 지시고 제대로 된 감사를

추진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를 하셔서 고속도로 위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주시고 정상화된 휴게소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추진계획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감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또 전체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되면 그 조사에 기초해서 당면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가,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 내용이 아직도 이렇게 일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위원님과 또 여기 계신 국회의원 전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가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공사가 어떻게 하나면요 운영사에 가서 ‘문제 있습니까?’ 물어보면 운영사가 ‘문제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를.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말했던 업체들도 너무 조심스러워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이게 알려지면 자기네 업체가 지목이 될 거고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어, 당신 말했어? 통화했어?’ 그러면 다음에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점주들이 떨고 있는데 도로교통공사가 어떻게 운영사에만 가서 물어보고 감사를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우리가 매우 낮지요. 240조 원 에너지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93% 수입 중입니다.

○**김성희 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너지 때문에 태양광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중국 도와주기라고 말하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에서 정말 발빠르게 중동 사태에 대응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즉각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 금융지원 사업을 편성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 기업 배 불리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90%가 넘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기업밖에 없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억압·탄압이 있어서 국내의 태양광산업도 상당히 붕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중국이 1등이지만 한국이 2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 업체를 키워야 되는

데……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다음에 보시면, 한국이 2021년·22년·23년에는요 국내시장 점유율이 35%였습니다. 그러다 언제 떨어지냐? 24년에 떨어져요. 방금 장관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목을 조른 꼴입니다. 지원을 다 끊으니, 중국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중국 업체가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을 가지고 국내시장으로 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중국 업체에 문을 열어 준 것은요 지금 김성환 장관님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멸절한 국내 업체들을 탄압해서, 물론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비슷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96년도에 애틀랜타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양궁 할 때 활을 어느 나라 것을 썼는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모릅니다.

○김성희 위원 미국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활 공급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가 양궁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대한양궁협회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는데 ‘좋다. 너희들 필요 없다’라고 한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회에서 외국산 활을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세하던 국내 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양궁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을 만드니까 기술력이 일취월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활을 만들었고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양궁이 기술로도 훌륭하지만 활로서도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업체를 키워 줘야 되는 마당에 이런 업체를 죽이면서 우리가 중국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장관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대표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이나 공장 지붕이나 영농형이나 접경지역 등등에 태양광을 늘려야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일종의 저탄소 모듈 사용을 의무화해서 국내에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형수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편파 진행을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그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예 질문 끝나고 한 오후쯤에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시지 그러겠습니까?

어떤 상임위원회든지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여야의 균형을 맞춥니다. 여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야당 간사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를 위원장님이 전혀 무시하시고 여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이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중국발 중국 관광객 문제, 문체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때 위원장님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무슨 당정 협의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지 마치 당정 협의를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꼭 바라고.

국무위원님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들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선수가 4선, 5선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대답하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설득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님들 그런 태도가 안 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무슨 선출된 권력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은 국회를 존중하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서로 양쪽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데 그걸 국무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데 왜 또 그런 주장을 하느냐, 사과해라……

우리 야당 위원이나 여당 위원들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그 설명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국무위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선수가 국무위원들보다 많지는 않지만 저는 국회 관례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추경안을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좀 길이가 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안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계속하려고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도 의사진행발언을 줘야지요.

○위원장 진성준 예, 그 점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셔서 국민 앞에 사안을 소상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사하갑 출신의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회의원 겸 총리직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국회의원 시절에 입법활동 많이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법안 많이 제출하셨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건데 국회의원들이 제출해서 통과된 법안들 이런 법들이 포퓰리즘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통과가 본회의에서 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되는 걸로……

○이성권 위원 포퓰리즘적일 수도 있다, 그런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게 포퓰리즘 법안도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100%는 아니겠지만 지난 다음에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은요? 의원입법은 그렇다 치고 정부입법은 포퓰리즘적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또한 어느 시대,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르다? 그러면 그런 구분들은 누가 합니까? 그런 구분은 누가 하는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또한 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그야말로 진짜……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바로 넘겨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의원입법들이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면서 부산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꼭 집어서 말씀을 했어요.

총리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포퓰리즘적입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걸 만든다고 후다닥’이라는, ‘급조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성안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무총리 김민석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모르지요? 대통령도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님, 이 법안 언제 성안이 시작됐지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아는 대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 3년 된 걸로……

○이성권 위원 3년이나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급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3년이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산에서 지난……

○이성권 위원 짧게만, 급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1대 때 한 번 제출됐다가 다시 제출된 법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두 번이나 제출이 됐지요.

그다음에 재정 부담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재정 부담이 될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 재정 부담 얼마 되는지 총리님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 법에서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얼마 정도인지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것은 특례 관련한 등등이 있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지요? 그런데 크다고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관련해서 부산 특별법이 특혜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특혜가 있습니까, 부산만의?

○국무총리 김민석 특혜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는 전반적으로 광역통합에 기초한 특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부정합할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걸 제가……

○이성권 위원 자, 그러면 그것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PPT 보시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1월에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차관이 단장을 맡아서, 차관보가 부단장을 맡아서 정부 부처와 모든 협의를 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하고 TF를 꾸려서 성안이 된 법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의원입법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성안을 한 정부입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끝낸 법안이에요. 이것은 포폴리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만 부산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성권 위원 요청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중앙정부는 전부 허수아비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시에서 낸 보도자료고 행안부도 같이 합의해서 낸 자료인데

2024년 3월 11일 날짜예요. 이때 보면 나온 것처럼 부산시의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차관보,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다 부산에 내려와서 이 법안과 관련된—그 밑줄에 나와 있습니다만—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은 내용적으로는 정부입법이고 형식은 국회에서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갔던 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때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보지요. 21대 때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그다음에 22대 때 한 번 더 제출되었는데 부산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 아마 다 익숙한 이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다 같이 참여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 법안을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이 의원들도 포퓰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인 인식을 가진 게 저는 심각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대통령이 발언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권에 대해서, 그것도 특정 법안을 하나 딱 집어 가지고 포퓰리즘적이다 혹은 급조됐다는 표현, 정부가 다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3년 가까이나 시간이 이미 걸렸던 법입니다. 이것 급조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권 위원 짧게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부산이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또 부산·경남 통합 문제도 논의가 되었고……

○이성권 위원 그 얘기 하시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왜냐하면 대전과의 형평 문제를……

○이성권 위원 그때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특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을 놓고서 그 사례를 드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의 가관인 모습입니다. 이 법안이 21대부터 발의되었는데 민주당은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이것 당론 법안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를 계속해왔는데 한 발자국도 민주당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여기 나와 있지요. 3월 23일 오전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로 와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삭발한다는 게 알려졌고요. 알려지니까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전재수 의원이 2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본인이 나서서 효능감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다음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만나면서 약간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안에서 짜고 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대통령까지 다시 짜고 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시지요.

제가 이 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은 21대 국회, 2024년 1월, 더 앞당겨서 말하면 2023년 12월부터 이 법안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거쳐 왔던 겁니다. 정부입법이고 형식은 의원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조율이 다 끝났고, 행안부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안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고. 아무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부족한 자구 수정만 이루어졌어요. 그 정도로 법 내용에 포폴리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어서 장관님도 답변을 하셨고 차관도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부산·울산·경남과의 공동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이성권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나옵니다.

그다음에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지요. 이 법안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뽑습니다.

장관님, 저 금액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부산시는 실무단이 구성이 돼요. 5년간 들어가는 금액이 39억 9300만 원,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수평적으로 다른 데 비교를 해 볼게요. 오늘 추경을 하는 이유가 전쟁 추경이잖아요. 26조가 넘는 돈을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매몰되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일회성 경비에 들어가는 게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52억 7500만 원이 들어가요.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줬을 때 그것도 52억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번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원 특별법에 5년간 지원하는 돈이 해 봤자 4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큼니까? 납득이 안 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넘어가기 전에 장관님, 아까 부산 특별법 관련해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했는데 광주전남통합법 얼마인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예산정책처에서 한 비용추계를 보면 502억이 들어갑니다.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부산 특별법에 비하면 12.85배가 많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산은 통합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는 지금 국회에 산정책처가 아니라……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는 취지도 제가 알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가 추계한 거는 177억입니다.

○이성권 위원 이게 과연 정부의 재정 부담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남·광주는 177억입니다.

○이성권 위원 심각한 손실을 줄 재정 부담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시스템 마련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같은 걸 정비하기 위해서 17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건 행안위에서 증액하신 거고요.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부산 특별법이 그렇게 정부 재정에 부담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광주전남통합법 관련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대통령께서 매년 5억씩 해서 4년간 20억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부산 특별법은 포퓰리즘 법도 아니고 정부가 같이 만든 법인데 부산은 어디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 취급받는 것이고 전남·광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애지중지하는 모양새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도 이전을 해 갖고요. 아니, 행안부가 아니라 해수부도 이전을 해 갖고요.

○이성권 위원 부산시민이라든지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면은 부산이 왜 그렇게 돈이, 재정 부담이 많이 안 들어가는가 하면 대부분의 지역 특별법들이 의무 조항보다는 재량 조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시에서 추산한 바로는 돈은 그렇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안 들지만 각종 유발효과, 기대효과를 보면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가 11조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조고 취업 유발효과가 9만 명이 넘는 걸,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적게 들지만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왜 막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국회 입법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딱 제동하는 바람에 서 버렸는데요. 이 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국회에서 제출된 게 2024년 5월 31일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다른 지역 특별법들 한번 보세요. 아시다시피 선입선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 관행에. 먼저 들어온 법들은 먼저 심의하고 먼저 통과시키는. 딱 부산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혹은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정책과 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시려는 취지하고 비슷한데요. 2024년, 제일 끝에 하단에 보면 부산·울산·경남은 이미 초광역 경제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은 행정

통합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그 로드맵에 맞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울산도 조건부로 행정 통합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산발전특별법의 경우는 울산과 경남이 연계되어서 물류, 금융 그리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연계효과로 지역의 남부권에 성장거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연구 결과로 내놓았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총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부산발전특별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수정될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반대와 찬성은 없습니다. 저것은 반대와 찬성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면서 판단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 그 발언을 하면서 이 법은 스톱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안위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발언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이유가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숙려기간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스톱이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올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과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한 내용처럼 이 법은 포퓰리즘 법도 아니고 급조된 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까지 똑같은 의견으로 정부입법적 요인으로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내용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총리님과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셔서 반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한 말씀드려도.....

○위원장 진성준 국무총리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해수부 이전 등에서 표현된 대통령님의 부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왜 광주·전남은 이렇게 하고 유독 부산은 이렇게 대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통합에 관한 지원은 광주·전남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도 할 경우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우대 또는 박대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된 지원을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적극적 지원을 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느냐 그 말씀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전달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국회 국방위 소속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총리님, 어제도 밤늦게까지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훈기 위원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유, 아닙니다.

○이훈기 위원 새벽 총리께서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 오늘 아침에 미국이 2주간의 이란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열었고요. 일단 시한부지만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상황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더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이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각 나라의 경유 인상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70%, 80% 오른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41% 인상이 됐고요. 유럽연합이 30%, 중국이 25%, 우리가 한 17% 올랐습니다. 물론 산유국은 거의 안 올랐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 이런 선제적인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기름값이 주에 따라서 40%, 어떤 주는 50%까지 올랐더라고요. 지난 3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800만 명이 참여하는 반트럼프 시위,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물론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도 있지만 저는 중동전쟁과 기름값 인상이 직접적으로 이런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게 저는 노킹스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추경을 보면 기존의 석유 최고가격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는 물론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편성했고 또 차량 5부제, 오늘부터 차량 2부제까지 하면서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전반적으로 잘 대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되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 저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되는데 추경을 안 할 경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추경을 안 하고 또 이러저러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물가도 올라가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과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이번 추경을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번에는 3개월 전후 정도의 전쟁 기간을 이렇게 염두에 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된거나 다른 상황이 있으면 또 다른 고민도 또 다른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현재로서는 하여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큰 틀은 그렇게 하더라도 부분부분, 골목골목, 현장현장에 따라서 훨씬 압박을 크게 느끼는 부분들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재경부장관님, 지난 3월 12일 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통상·무역 문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서 자본금 2조 원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정부에서 일단 1조 1000억 원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금년 예산에……

○**이훈기 위원** 그러면 2조 원의 모자라는 9000억, 나머지는 언제 편성을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국하고 어떤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고 또 우리 재정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조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게 빨리 소진될 것 같으면 또 빨리 자본금을 확충하고요.

○**이훈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직후 3월 말에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 네 분, 하원의원 열한 분, 국무·상무·에너지부 관계자 그리고 미국 싱크탱크 네 곳 관계자 수십 명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단순히 퍼 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공급망 확대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지금 미국에서 마타도어 프로젝트라고 텍사스주에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7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데 제가 보니까 현대건설은 이 사업의 투자를 아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잘해서 미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잘 연결해 주면 이게 좋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가서 미국 차기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이분이 텍사스주 출신인데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현대건설이 관심이 있다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정부가 좀 잘 연결해 줬으면 하고.

또 한화조선도 필라델피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지금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중에 조선 분야도 1500억 달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간 기간 중에 미국 CBS 60 Minutes에서 마스가 플랜 그리고 한화조선에 대해서 60분짜리 시사물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갔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한국 조선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걸 좀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부장관님 안 나오셨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훈기 위원** 교섭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미투자가 퍼 주기가 아니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 또 미국에 서로 상호 이익이 되려면 준비를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개월 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3개월 후에 시작이 될 건지 그리고 대미투자에 대해서 1·2호 사업 같은 거는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략적인 투자가 우리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시행 전에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훈기 위원** 그러면 대미투자 1·2호 사업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거는 일단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될 거라고 보고,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전 분야나 조선이나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고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미국이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총리님, 지금 이 대미투자특별법 보면 산업부·재경부·외교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데 총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님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퍼 주기가 이렇게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퍼 주기가 결코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퍼 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모두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국민들께서 자꾸 이거는 퍼 주기, 공짜로 주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훈기 위원** 예, 저도 이번에 가서 약간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상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러 상·하원 의원, 그리고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쿠광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느냐?’, 제가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분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쭙볼게요.

쿠광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쿠광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월부터 수차례 고위급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상·하원 의원들, 위원님 말씀하신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나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수십여 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웃리치를 하면서 쿠광 정보유출 조사 건은 한국의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게 과거의 여타의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전혀 다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빌 해거티 의원이나 여러 분들한테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팩트가 잘못됐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쿠광을 차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쿠광 경영과 직결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쿠광의 정보유출이 3000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 민간조사단이 조사한 것은 3367만 건이다, 무려 1만 배의 차이가 난다, 이 팩트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한국 정부가 절대 쿠광을 차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SK 텔레콤에 대해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2324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쿠광보다 적은 정보유출이지만 3개월 간의 집중조사를 거쳐서 50일간의 신규 영업정지를 했고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텔레콤 정보유출의 단 한 건도 범죄에 활용된 것은 확인이 안 됐지만 이렇게 책임을 물었다. 쿠광에 대해서는 지금 4개월이 지났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조치도 취한 게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할 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의 로켓배송, 새벽배송이 성공한 것은 집 앞에 물건을 놔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직성과 선진문화에 기인했다. 쿠팡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쿠팡이 성장한 거다. 쿠팡의 매출액은 2022년에 20조 원, 2023년에 30조 원, 2024년에 40조 원, 작년에 50조 원인데 매년 10조 원씩 늘고 있는데 전 세계 170개국, 쿠팡이 영업을 하는 170개국 중에서 전 세계 매출의 90%를 대한민국에서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서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쿠팡의 경영과 직결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거티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감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잘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도 만들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과거보다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른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미국에서 불필요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과기부총리님!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훈기 위원** 지금 AI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로, 그리고 저는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GPU를 구하려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NPU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저는 AI 주권, 소버린 AI에 있어서 이 NPU 환경을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K-엔비디아 프로젝트 해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NPU는 전력…… 우리가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지역 간, 정부 부처 간도 서로 이견이 많은데 전력 문제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NPU 중심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틱 AI 시대입니다.

에이전틱 AI 시대라고 함은 기존의 AI 학습보다 AI 서비스가 중요하고,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많은 AI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저전력 그리고 합리적 가격의 NPU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NPU 개발에 집

중 투자하고 있고 지금 투자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되고 있는 업체 이외에도 한 5개 이상의 NPU 업체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 NPU 업체들을 우리가 잘 지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에서도 마중물 역할도 하고 해외수출 지원도 하면서 NPU 시장을 글로벌리(globally)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 천안시을의 이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리님과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기후부·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39일째입니다. 2주간 휴전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듯합니다. 지금 당장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설비 손상과 복구로 공급 문제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든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원유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이번 분쟁으로 비전투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일 것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생산의 불확실성도 커져서 기업의 경기심리를 보여 주는 업황 BSI 전망도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동사태 대응 추경을 발 빠르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는 이번 추경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신속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중동사태는 IMF 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국민적 대응이 절실히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최고가격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을 자체 팀을 유기적으로 짜서 매일매일 대응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상황 관리 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의 각 품목 관리 등등을 할 수 있었고……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피해,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처방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빛 없는 추경입니다.

총리님, 최근 국제유가는 3월 중에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 평균 14%

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우리나라는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연구기관 시나리오에 의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110불, 명목 GDP는 이로 인해서 74조 원이나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의 하방압력은 1.2%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유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생산비용은 63조 원이 증가하고 가계의 민간소비 구매력은 0.9%가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중동발 유가의 국내 영향이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본격적인 경제 충격은 5월이 시작점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고가격제 등을 도입을 해서 나름 유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유가가 2200원 이상으로 와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고통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중동 사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라는 그런 불확실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석유 공급의 충격은 우리가 70년도에 겪었던 두 차례의 오일쇼크의 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LNG 공급으로 인한 충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2배가 넘는 충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세계적으로 석유와 LNG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역대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도 10배 이상의 충격을 줄 것이다. 앞으로 두 달에서 6개월 동안 운송과 물류,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물가 상승 압박과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터넷과 IT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 개방 압박을 문화 자부심으로 극복을 해서 K-컬처라는 한류문화를 꽃피운 국민적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의 공급과 소비 구조, 즉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철도 중심의 물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총수입량의 15% 이상을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많은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세계 LNG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유가랑 연동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실제 21년 EU·러시아 간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에 수입 물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국내 LNG 도입 비용은 2배 가

까지 높아졌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계기로 화석 연료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또 추가적인 연료비용이 없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원유나 가스의 불모지인 우리나라가 더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어제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대로 하되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해서 이참에 대한민국이 소위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1차 에너지를 비롯해서 수송이나 산업이나 건물이나 그 밖의 모든 것에서도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가 이런 중동전쟁 과정에서도 그 걱정의 정도를 크게 덜 수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관련해서 장관님, 미국은 육상풍력과 태양광발전 비용이 가스복합발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복합발전 대비 태양광 플러스 ESS 또는 풍력 플러스 ESS 이 발전 비용이 가스복합발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우리도 태양광은 실제로 생산가격은 많이 낮아졌습니 다만 거기에 REC나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조금 비싼데요, 이번에 REC와 관련된 RPS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를 하고 계약입찰시장제도로 바꾸면 실제로 석탄이나 가스보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가격을 그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러한 어떤 보조와 관련된 에너지자원부 차원에서 반영이 됐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도적으로 RPS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입찰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입법 사안이라 그것 역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전력믹스 현황을 보면 EU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개선 진전도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EU의 경우에는 보니까 2022년보다 2025년도에 증가를 해서 3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태양광이 6.4%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화석연료 의존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탈원전 논쟁 때문에 좀 뒤쳐졌고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오직 원전만 하다 보니까……

○이재관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8년간의 제로섬 게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관 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 삭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퍼 주기 아니냐, 이게 추경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는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의 추경 편성은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체계 전환의 어떤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것이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국내 태양광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 공급망 취약점이 이미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태양광, 풍력 등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기반 전환,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다음,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도 관심 있게 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내의 석유 소비, 석유화학 연료용을 제외했을 때 수송용이 66%, 산업용이 23%, 건물용이 11%로 수송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재관 위원 특히 수송용 석유 소비는 도로 수송에서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도로 수송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가 도로 수송 석유 소비를 주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물 수송에서 철도 비중은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한때 칠팔십 %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물량 기준으로 보면 1.4%, 거리 기준으로 보면 3.9%까지 낮아졌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혼잡통행료라든지 대중·대량 교통수단 지원 등을 통해서 도로 수송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이재관 위원 한국의 철도물류 수송분담률이 1.6%로 주요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연동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도로 수송하고 철도 수송 간의 지금 현재 어떤 경쟁 환경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철도화물시설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복합운송터미널에서는 최대 80% 또 독일은 전기기관차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비 지원 등 그러한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철도 수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 규모가 연간 1.5조에서 한 1.7조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전환교통 보조금, 즉 도로 수송을 철도 수송으로 변환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 그것은 연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삼사십억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1조 5000억에서 1조 7000억 원, 그런데 전환교통 보조금은 연간 삼사십억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철도수송이 늘어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시설 사용료 역시 심야통행료를 일부 감면해 주지만 선로 사용료는 감면이 없다고 합

니다.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철도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비를 상향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선진국처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30억 수준인 전환교통 보조금을 상향하거나 철도선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어떤 그러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도 협의를 하겠고요. 또 선로 사용료와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위상 위원님과 송기현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총리님, 연일 이틀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 편성 목적과 긴급성, 적시성, 신속성 이런 부분에 맞춰져야 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상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재정의 무제한 확장은 우리에게 고환율·고물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경제를 더 목 죄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국세청 체납관리단 그리고 관광산업 융자 지원, 교통방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환율·고물가·고유가, 이 3고 쇼크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를 하겠는데 총리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년째 동결이라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니다.

○**김위상 위원** 올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시간당 지금……

○**김위상 위원** 그런 자세한 수치는 노동부장관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1만 320원입니다.

○**김위상 위원** 2018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 되지요?

7530원입니다, 2018년도에. 이를 달러로 환산하니깐 2018년도에 6.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하니깐 6.9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간 노동자 임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화폐 가치가 추락했기 때문에 폭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물가 때문에 그렇지요.

○**김위상 위원** 그리고 같은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2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같은 기간에 3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나 2025년도나 2026년도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고환율·고유가 또 고물가, 이 3고 쇼크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쇼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풀기로 3고 쇼크를 더 부채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1500원대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환율이.

총리님, 고환율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환율이 지금 중동사태 이전에도 여러 측면에서의 수요·공급상의 문제로 저희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한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경제 당국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면 고물가는 좀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RIA를 포함해서.

○**김위상 위원** 그래서 고물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기업 압박지르기 외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는 좀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가장 간절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이다.

고유가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피해가 있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직간접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더 하층으로 갈수록 피해가 강해지는 것이고, 직접적인 직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유류 사용이 높은 부분 중에서도 트럭과 관련된 업종을 하는 분야,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예, 맞습니다. 유류비……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택시·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26조 규모의 슈퍼 추경안에 이들을 위한 유류비 안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총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유류비는 곧 매출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PG 가격이 급등한 현재에 수입의 30% 또는 50%가 유류비로 지급된다는 이런 사실 정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는 보편적 지원금, 매달 수십만 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유류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지금이라도 이들을 위한 유가보조금 예산을 좀 촘촘한 곳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화물·택시 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더 보완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잘 상의해서 아마 같이 논의해서 처리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노동부장관도 좀 심도 깊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주말에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첫 인정 사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충남지노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네 곳의 공공기관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첫 인정 사례가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원청인 공공기관이 교섭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 즉 나아가서 행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충분히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법적으로 더 명료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서의 정부적인 주장은 현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정부의 정책·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이런 사항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가 교섭 테이블에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보를 보면 모범 사용자는 고사하고 본인들이 개정 노동법의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교섭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총리님? 모르시지요?

장관님,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혁신처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예, 인사혁신처입니다.

현재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인사혁신처장에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김위상 위원** 그러면 총리님,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결정권이 인사혁신처장한테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이라든가 그걸 원청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과 연관하면 가령 정부의 총리나 대통령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법적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보면 다른 헌법기관들은 교섭대표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행정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역시 최소한 국무총리가 교섭대표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은 진짜 사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장을 바지로 내세워 놓고 교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법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노동조합법을 존중하고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적극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처럼 정부의 예산 사용에 의한 집행 또는 국회에서의 결정에 의한 임금 등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토론이나 심화 과정에서 정리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김위상 위원** 중앙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혁신처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지노위에서도 분명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지난 주말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또 총리님이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노동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께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외국 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 인력 정책에. 지난해 예결위 결산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비자 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총리께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장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취임 이후 보니까 법무부의 비자 정책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바꾸겠다, 법무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 그 이후 열 달이 흘렀습니다, 열 달이.

외국인근로자 비자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총리님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을 몇 번 중간보고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나와 있으면 직접 설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오늘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김위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법무부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 비자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결국 법무부가 소극적이면 노동부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모든 정책과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께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확인을 다시 해 보고 필요하면 법무부 뿐만 아니라 노동부 그다음에 관련 경제부처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장관이 자신 있게 공언한 대로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이 돼야 된다, 경제를 살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전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원주시율의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를 송기현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이번 추경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5군데로 확대하는 예산 706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는 10개가 됐었는데, 10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10개 지역 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두 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단 10개 군 기준으로 인구도 1만 37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상점이 새로 신규 오픈하기도 하고 기존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1200개 정도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기본소득을 지역 안에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미 사용액이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 활성화의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 유대가 단단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시범사업 한 세 달 정도 했는데 인구가 4.3% 증가가 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용률이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한 게 66.6%가 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77%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송기현 위원 가맹점주가 약 7.8%가 증가해서 인구소멸지역인 농촌지역 이 부분에 분명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이번에 5개 지역을 추가로 하는데 5개에 효과를 추가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이제 세 달 정도 운영한 경과를 보면 약간 좀 부족한 데는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개선해야 될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하나가 물론 지역 내 소비하는 게 읍면 단위로 돼 있는데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생활권이 읍 단위로 되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면 단위로만 소비를 하도록 하면 특히 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대체로 가맹점 자체들 봐도 면 지역에 있는 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는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기본소득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일단 가맹점 자체도 굉장히 적으니까 가맹점이 적은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는 쪽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천 지역 같은 데 대표적으로 뽑아 보니까 연천에, 면 하나 지역에 한 100개가 안 되는 상점들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사용할 데가 거의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그래서 이동장터 이런 것도 한다거나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권 묶음을 확대하는 등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게 주유소나 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서는 월 5만 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만 원.

○송기현 위원 5만 원으로 제한해 놓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서 사용하는 한도가

정해져 버리니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난 3월 26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좀 개선하는 방향을 낸 게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몇 개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사용 제한, 그러니까 30억 원이 넘어도 쓸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카드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조폐공사랑 협의해서 대폭 줄여서 지방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했고, 지역별로 생활권 묶음들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창업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동장터 방식으로 주문형 이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개선들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람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서비스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도 있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이 점이 이번 추경 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기현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원주 같은 지역이나 지방 지역은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 지방소멸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률로 해 가지고 국고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40%가……

○송기현 위원 40%가 딱 지원돼서, 국가는 40% 하고 도가 30%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30%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정률로 지원하게 되면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사실 인구소멸지역은 거의 다 대부분 어려운 지역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주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어려운 지역이고 십몇 %밖에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미처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과제인데요, 위원님. 재정자립도나

인구감소를 살펴봐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도 균형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과제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햇빛연금 이렇게 재생에너지 같은 기반을 가지고 스스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이 시범사업 기간에 좀 개선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잘 적응돼서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그래서 햇빛연금이라든지 바람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하면서도 지역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처와 같이 협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데에 쓸 재원을 때 가지고 쓰는 경우가 생겼어요. 순천인가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순창군에서, 아마 지난 4월에 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순창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정착수당 등 132억을 삭감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량에서 볼 때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몇 개 지역 따져 봤는데요, 위원님. 주민들 개개인이 받는 액수 측면에서는 사실은 줄어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조조정을 해서 더 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플러스되는 걸로 알았는데 조정이 되니까 다소 그런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도출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정책 설명을 잘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첫째는 사용에 관련, 사용을 좀 늘릴 수 있는, 사용의 편의를 늘려서 좀 더 확보, 많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국고 지원을 덜 받는 이런 역효과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송기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하셔서 이번 추경으로 된 5개 지역에서는 좀 더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아닙니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송기현 위원** 경기가 어려울 때 좀 더 어려운 지역은 사실은 인구소멸지역과 같은 농촌지역, 더 어려운 지역이 더 금방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그럴 때 그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살려 놓고 그래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다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추경의 정말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을 돌보는 것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존 3개월 동안 잘해서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생겼다고 생각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실제로 인구 유입도 어떤 분들은 옆에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송기현 위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옆 지역, 인구소멸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온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도시와 수도권에서의 움직임 비중이 훨씬 큼니다. 그래서 연천을 제외하더라도 9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5명 중의 1명 꼴은, 즉 20% 정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이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송기현 위원** 기대했던 인구 유입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소비된 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있는 거니까 이런 점이 좀 더 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제가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무기질비료 예산도 좀 지원이 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이게 지금 무기질비료 42억 원이 이번 추경에 책정됐는데, 장관님 생각에도 이게 굉장히 부족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재정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무기질비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소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요소야말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이 요소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무기질비료라는 이 비료가 농업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만큼 연쇄적으로 되면서 이게 농민한테 가장 큰 피해가 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장관님께서 하시겠지만 추산을 해 보면 상승된 부담이 한 65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40억 정도만 추경을 해 놓으면 농민들께서 부담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로 30% 정도 해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액수인 거거든요.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위원님.

○송기현 위원 맞습니다. 단가 자체도 좀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무기질비료 단가가 한 십몇 % 올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거의……

○송기현 위원 더 올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더 올랐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비용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기현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과 부총리님도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촌 유류비, 면세유 문제인데요. 면세유가 지금 주유종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유소들이……

○송기현 위원 경유 빼고, 난방유에 중유, 등유 이런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등유, 경유, 휘발유 다 면세유에 들어가긴 합니다.

○송기현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번에 반영된 것은……

○송기현 위원 반영된 것은 경유가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설농가의 난방비로 쓰는 등유만 반영이 됐습니다.

○송기현 위원 등유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쓰는 유류로는 대부분 경유도 굉장히 많거든요. 농기계는 대부분 다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기계는 주로 경유와 휘발유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농가 빼 놓고는 이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설농가의 경우에도 지금 3월·4월·9월분 이렇게 세 달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쟁의 여파가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활발해지는 계절이라 경유와 휘발유 이렇게 모든 유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농기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트랙터도 하고 벼 이앙기도 해야 되고 다 농촌에서 기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경유가 지원이 안 되니까 있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기현 위원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면세의 경우에는 원래 과세 기준 기름에다가 유류세가 들어간 거기서 유류세를 면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지금 유류세를 내리잖아요. 아니, 면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면세유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조를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기현 위원 유류세 인하 전에는 휘발유 과세가가 138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유류세가 736원이 돼 가지고 면세가가 1067원이 되는데 유류세를 698원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1830원에서 이걸 빼면 1132원이 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휘발유는 면세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송기현 위원 경유도 마찬가지로 87원이 올라가요, 똑같은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유류세는 내려가지만 면세유로 혜택받았던 농민들이 쓰는 기름값은 면세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간 거지요, 그냥. 유류세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쓰시는 경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유가보조 지원하는 것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추경에는 등유 부분 한 70억 정도만 배정이 됐는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쓰시는 또 유류세가 면제가 되면 오히려 부담이 늘나는 경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예산처장관님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예산처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농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위원장 진성준** 송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관 1층에 있는 제2식당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고요.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의 첫 번째 질의는 울산 울주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총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맛있는 것 드셨는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냥 보통 밥 먹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행안부장관님 오셨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행안부장관님은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몇 번 논쟁을 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4.8조 원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유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 또는 어떤 업종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대상을 지금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자꾸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위 할 때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 특히 화물·택배·택시 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자동차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은 몇 번 들었고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어제 여야 민생협의체인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거기서도 장동혁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도 말씀 주셨고요. 가급적 직접적 피해를 입는 계층을 특정하고 전달 방법도 특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비교적 경제적인 아주 상류층을 제외하는 부분도 하면 좋고.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국무총리 김민석 다만 전달……

○서범수 위원 그때 행안부장관님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서 이런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정유사한테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든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요, 일본이 지금 리터당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200원 이렇게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서범수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최고가격제로 낮추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아파하는, 민생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두텁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비 매칭입니다. 80 대 20, 그래서 지자체는 1.3조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거께 대통령께서 지방교부금으로 9.7조가 내려가니, 그리고 1.3조를 빼면 지방 재정 여력이 많다고 하셨지만 9.7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렇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거의 반반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정도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4.6조……

○서범수 위원 4.6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7조.

○서범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단 확인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기 PT 한번 보시면 수도권에 10만 원, 적게는 1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 인구감소특별지역이 25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한 60만 원까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 대 20으로 못 박아 놓으면 재정이 열악한, 특히 인구감소특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특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역진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미세하게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볼 때는 지방교부금이 이렇게 감소지역에 더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방교부금 받으면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달리니 쓸 데가 많다고요, 그 지방교부금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만 하시고……

그리고 특히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차상위 내지는 기초수급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이라서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델리ケート(delicate)하게 좀 설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건 잘 살펴 주시고요.

○**서범수 위원** 지난 민생쿠폰 할 때는 9 대 1로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52억 원도 들어갑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52억이라는 게 적으면 적고 크면 큰 돈인데 이걸 한번 쓰고 용도 폐기해 버리거든요. 지난 코로나시대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쿠폰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한 50억 이상되는 돈을 넣고 없애 버린다고요. 없앤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클라우드를 이용, 임대비로 한다고는 하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지만 저걸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클라우드 임대를 계속해야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나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진짜 다양하게 한번 방안을 강구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52억 주고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52억 넘기고……

한번 틀어 봐 주실래요? 왜 꺾습니까, 전광판?

잠시만 스톱을 시켜 주십시오.

그런 데다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집행료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25억 들었습니다, 25억.

저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실 것.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범수 위원** 25억 들었습니다. 그때 대상자가 5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500만입니다. 그런데 29억이 들어요. 대상은 적은데 오히려 금액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도 조그만한 금액이지만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였나요? 처음 지원을 할 때 시스템을 저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유지를 하자라고 해서 서버까지

전부 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쓰고 나서 그다음에 그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다른 용도로 써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서범수 위원 이해했어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불러서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95억 원인가 이 부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인지 사회연대 활성화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조례에 의하면 최대 49세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게, 특히 시범사업을……

기획예산처장님, 시범사업을 추경에, 특히 전쟁추경이라면서요.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어 넣을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지금 청년 고용률이 알다시피 고령층 고용과 작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매우 악화되는 것이고……

○서범수 위원 그런데 청년 고용이라는 게 꼭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낮아진 거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수치가 누적된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기 때문에 더,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더 악화될 상황 아닙니까,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부분이라서 과연 이게 그렇게 전쟁 추경을 하는 데 슬쩍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이나 하는 거지요, 제 말씀은.

청년에 대한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이걸 이번 기회에, 전쟁추경이다 뭐 이렇게 시급한 추경에 슬쩍 끼어서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노동부장관님, 이런 사업 노동부에서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시지요? 그리고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서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가로 223억인가 4000명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10인 이상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것은 사회적기업.

○서범수 위원 예, 사회적기업. 그것 왜 10인 이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10인 미만도 가능하게 하기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서범수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10인 이상이거든요. 왜 10인 이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10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서범수 위원 그것은 아마 멘토링 역할, 그러니까 10인 이상 정도 되어야 전문가들 있고 해서 청년들을 거기서 고용을 해서 배울 것도 많고 양질의 그걸 체험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서범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행안부는 지금 비슷한 사업을 벌이면서 10인 미만으로 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개 협동조합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가 10인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질의 멘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과연 10인 미만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양질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상근자를 말하는 거고요.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이 많은 데는 수백 명이 되고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인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전쟁추경이라면 전쟁추경답게 요건과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환 장관님, 아직도 입에 제가 잘…… 기후에너지환경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서범수 위원 추경 목적에 보면, 추경 발표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대응을 재생에너지 확대, LNG 절감, 원전 재가동으로 병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니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추경이 하나도 없어요. 답을 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할 사안은 아니고 지금 정비 중인 원전 재가동을 빨리 하는 일이……

○서범수 위원 재가동을 좀 빨리 해 주시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이런 걸 좀 담아서 더욱더 재가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원안위의 승인하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5월 달에도 3개 정도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으로……

○서범수 위원 추경에 이런이런 항목이 있는데, 에너지 대응에 대해서 원전도 재가동하기 위해서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원전 관련해서 재가동하는 부분이 우리 에너지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여러 차례 정책으로 발표했고 지금 하나씩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신규 원전 지금 두 기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은 부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마침 두 기 중에 우리 지역에 그걸 하나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울주입니다, 울주 서생의 새울원전에.

거기 보면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 잘 닦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하나만 여쭙보려고요.

2024년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취약지역의 기준을 보정하는……

○서범수 위원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취약한 지역에도 특수의료장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된 지, 2024년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요. 왜 이렇습니까?

각 지역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아직까지도 이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지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지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빨리빨리 구성해서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게 아무래도 전문인력 부분들도 같이 조정을 해야 돼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 문제라서 죄송하지만,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결국 불허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전략영향평가라든지 1차, 2차 여러 가지 갖출 것 다 갖춰졌는데 막판에 불허를 했어요. 그걸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막판에 행정 절차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월 31일 날 불허 통보를 했어요. 그 과정이 지금 얼마나 하면 12월 30일 날 17시 40분에 공문 결재 완료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날—기후환경부 참 열심히 일합니다—23시 18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장 인사발령 공문 기안을 해서 발령을 내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다음날 13시 10분에 협의내용 회신 공문을 발송해 버립니다. 청장 발령 어디로 내 버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불허 해서 통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겨 보십시오.

담당자들 전부 조퇴합니다. 전부 조퇴해요.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대한민국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부터 시작해서 결재 라인이 전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렇게 공문만 덜렁 보내 놓고.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제가 낙동강관리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했었습니다. 공통능선 칼바위인가요 그런데 아마……

○서범수 위원 그거는 알고요. 그 내용을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 하는 체계가 저게 말이 되느냐고요. 대한민국 행정공무원들이 저렇게 무책임합니까? 자기 결재해 놓고 그날 밤에 발령 나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그날 항의 전화 올까 싶어서 전부 조퇴해 버리고 맙니다.

총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이 당당하지도 못하고 무책임합니까?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챙겨 보겠습니다.

낙동강청장이 아마 마지막까지 본인이 임무를 다 하고 인사이동 과정에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서범수 위원 자기 임무 다 했지요, 결재하고. 자기는 그것 결재하고 그날 밤 11시에 장관님 결재 받았을 거고 그러고 다음 날 오후 1시쯤 돼서 공문을 울주군에 보냅니다. 보내 놓고 자기도 연가, 국장도 연가, 과장도 연가, 팀장도 연가,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울시 관악갑 출신의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먼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박민규 위원 아시는 것처럼 서울 서부선 철도사업은 저희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은평구까지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을 잇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서부선은 시민의 출퇴근과 일상생활 그리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교통인프라 사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부선 사업은 2020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고 그 결과 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특히 24년 12월에는 민자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두산건설컨소시엄 간의 실시협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아서 멈춰 있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5년이나 지났고 착공이 안 됐는데 급기야 지난 4월 1일 자로는 서울시가 두산건설 컨소시엄 지위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그동안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자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물론 여러 가지 공사비 상승 및 대외 여건

변화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필요한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전환도 그런 데 대한 결단도 미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마자 지난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선을 포함한 정채되어 있는 도시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3~4년 동안은 서부선 수요, 원했던 시민들의 수많은 원성과 많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는 묵묵부답,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선거를 앞두고 다시 말로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는 발표만 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서부선 사업이 현재 민자사업이 취소 통보가 돼서 취소가 된다면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이 사업의 주관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3월 31일 자로 이 출자자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서울시가 두산 컨소시엄에다가 전달한 상태고요. 이게 100일까지 의견수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박민규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지정을 취소하는 이 처분계획을 7월 이후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산은 그 사이에 이 건설 출자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전에 의견을 좀 주셔서, 저희로서는 이 추가 자본이 필요할 경우에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출자금의 3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280억가량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때까지 이 건설 출자자를 더 추가적으로 다 충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한편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절차는 다시 주관 부처인 서울시가 이 민자 재공고를 추진할 때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투심 의결을 포함해서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규 위원 맞습니다. 민자사업이 제안된 게 2017년이고 현재 2026년, 10년이 지난 뒤에 결국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사업자 선정된 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 채 다시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지금 출자자 확보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하게 빠르게 착공될 건데 현재 또 여러 가지, 고유가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가 20% 상승하면 건축원가는 기본 4%, 토목원가—철도사업은 토목이지요—거기는 7%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착공해서 했어야 하지만 그나마 됐던 이 기회를 다시 또 새로운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사실 이 서부선은 10년 동안 시민들을 희망고문한 채 지금까지 표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논의 없이 오로지 다시 출마를 하겠다면서 도시철도사업을 잘하겠다고 말로만 하는데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기획예산처에서 인프라펀드를 적극 운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주셨고 그 안을 다시 서울시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행정에 공백이 있지만, 현재 이의신청기간이지만 출자자들에 대해서 그 기간, 취소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펀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 거기 관련돼서 서울시의 접촉이 있었다는 공식적 공문이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제가 그건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만약 좀 더 책임을 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인프라펀드 제공과 함께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서울시가 또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신속예타로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서울시의 전적인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만약 전환된다면, 그럴 때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신속예타를 신청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450만 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무공해차의 현재 누적 보급 실적은 25년 약 94만 대로 20% 수준이지요.

무공해차 보급은 탄소중립과 관련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이번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에너지 위기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유가상승과 자동차업계—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까—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도 인하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올해 3월 기준 전국 160개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전기승용차는 40곳의 지자체, 전기화물차는 51곳의 지자체에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보조금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이에 기후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중에 소상공인 등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 전기화물차의 증가되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올해 이번에 900억 원의 추경을 증액 편성한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맞기도 하고요. 자금이 바닥난 것은 일종의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방정부 예산이 떨어졌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떨어졌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작년 9월에 발표하셨더라고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관련해서 바닥이 났다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약속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신뢰를 줘서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특별히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지방정부 예산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박민규 위원 시스템을 만들었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사업이라는 게 20년, 21년에는 막 수요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였다가 23년과 24년에는 또 전기차 화재 사건 및 캐즘으로 인해서 많이 늘렸던 예산들이 불용되다 보니까 아마 기후부 입장에서든 여러 가지 추정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금 후 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이면서 이번 추경에서도 그걸 반영했을 때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좀 살펴서 업무 협조를 좀 더 확대해서 지방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우선 소상공인들이 쓰는 트럭용은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승용전기차도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예,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제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갑 지역은 1인 가구 비중이 제일 높고요, 39세 이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배달음식 수요나 공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온 골목 골목마다 오토바이 소음, 매연, 특히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기오토바이 보급 관련돼서도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오토바이 배달과 관련해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쿠팡 이런 데에서 배달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그런 주요한 플랫폼 배달업체들이 우선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얼마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부터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기획처 박홍근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중동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쳐 가지고 특히 석유화학·철강 업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어쨌든 아껴야 되는 재정이지만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산업계 얘기를 좀 들어 봤더니요 결국 필요한 것은 철강·화학 이런 업체에서는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어떤 개별 기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안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위기로 몰려 있는 석유화학·철강 이런 업체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은 좀 빠졌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금 그 지역들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업계가 매우 어려운 것,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요.

그런데 이번에 알다시피 공공요금 또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한 추가적 전기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다, 이번 추경 목적과 부합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 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것보다 더 심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도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도 저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함께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지원하면 이게 아마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다, ‘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느냐, 다 어려운데’ 이 얘기가 당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평성 측면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차보전이라든가 기술 컨설팅 또 재직자 전환훈련과 같은 이런 부분의 추경에 지원을 확대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방금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고 하지만 사실 에너지비용은 결국 상승한 것이 다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5~6개월 뒤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수급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비용만큼이라도 지원하면 훨씬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과거에도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전기요금 인하는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2020년까지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결정으로요. 그리고 2022년까지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료 상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누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 때문에 2022년 이후에는 사실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석유·화학의 여러 가지, 공급 과잉이든 여러 가지 구조적 위기도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산업부나 다른 쪽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자율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실 중동 위기로 앞으로 6년, 10개월 뒤……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여신…… 모든 기업 경영은 1년, 2년 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지금은 동결했지만 6개월 뒤에는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특정 지역에 제한돼서 선례가 될 나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고려되지만 아까 말씀처럼 과거에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된다 또는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기획처장관님의 답변은 조금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아무튼 경제위기에 밤낮없이, 최근에 모 부처 외환담당 과장님이 하루에

두 시간 잔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현장 공무원들·사무관들·서기관님들·주무관님들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추경안 심사로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과 국무총리·국무위원들 또 보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위해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회의장 출입문 양옆 탁자와 휴게실에 떡과 식혜가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또 총리·국무위원들께서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성격이 전쟁 추경이고 고유가 대응 추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대통령께서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민생경제의 전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원칙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중에서 가장 큰 증액사업이 예비비 5조 원이지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지원 예산입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거기를 포함해서 대부분……

○전종덕 위원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정유사 손실을 지원할 계획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정유사 손실의 산정 방식이나 보전 기준이나 정유사별 배분 원칙 같은 이런 게 추경에 전혀 없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의 홍보자료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손실보전을 하는 건지 자체 기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당연히……

○전종덕 위원 어떤 기준과 또 얼마를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예비비에 그 부분을, 목적예비비에 담아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산업부와……

○전종덕 위원 예,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에너지연구원이 산출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왜 이것을 밝히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종덕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야 당연히 산출 근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분기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담아 놓은 것인데, 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을 때 향후 산정·정산 과정에서 정유사 등 시장에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재경위 소위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정유사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산정 방식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고요.

○전종덕 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산정 방식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산 방식은 다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그러면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분을 계산하고 그것을 제출하면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된 최고가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적정 보전액을 산정한다 이게 지금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검증을 해야지 전문가한테 위탁하고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정부는 뭐 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산정·정산 과정에는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과의 회의 속에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예산처도 거기에 참여해서 제대로…… 알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을 저희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손실만큼만 정확히 저희가 산정해서 그만큼만 저희가 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그러면 장관님, 국회가 지금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산정하고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지금 백지수표를 내놓고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미 산정 방식은 규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종덕 위원 저는 정유사 손실을 지원하는데 그 손실을 얼마를 지원할지, 100%를 지원할지 50%를 지원할지, 그러면 손실분만 지원할지 기대이익까지 지원할지, 기대이익을 지원한다고 하면 100%로 할 것인지 50%로 할 것인지 30%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국민들하고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저는 이게 책임의 외주화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부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또 다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일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원가에 기반해서 손실 부분만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기대이익은 보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원가에만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원유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전종덕 위원** 지금 정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기름은 지난번에 수입해서 재고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썬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지금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그 판매액에 기초하면 정유사는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소위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유부터 시작해서……

○**전종덕 위원** 장관님,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운임비라든가 정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 원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정유사들은 과거에 수입한 기름을 팔고 있겠고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득을 보고 있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영하듯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의 영업이익이 SK이노베이션은 전분기 대비 2100억을 그리고 S-OIL은 1900억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은 많은 이익을 정유사가 챙겨야 되는데 좀 덜 이익을 챙기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정확한 산식과 기준을 제시하시고요, 저는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정유사 지원에 대한 기준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하고 기름값 인하 9.7조 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서민 부담 완화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로 기름값을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름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예정처 분석 자료를 보면 유류세 28%를 인하했을 때 상위 10%는 연간 38만 3000만 원을, 하위 10%는 1만 5000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5배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지원 구조로만 보면 자동차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리고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또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덜 하는 사람이 또 덜 지원받게 되는 이런 역진적 지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유류세 인하로 하지는 않았고 먼저 최고 가격제로 시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유류세 부분도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번에 2차 가격 산정하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역진적 지원이 아니라 열악한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조적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에너지 효율이나 수요 대책,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든지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것을 다 합쳐 봤는데 5600억에 불과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유류세나 정유사 지원은 10조 원 가까이 배치하는데 정작 에너지 구조 전환, 에너지 안보 대책에는 5600억밖에 배정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거꾸로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유가에 대해서 다음에도 충격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우선 배치를 하고 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직접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공급이 인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완적 수단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우선순위로 추경을 재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장 더 충격을 받는 데 우선적인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어떤 전환과 전략적인 계획에 있어서 당연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이게 끝이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 모시고 저희가 소위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국가적 전략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민생의 전시 상황이라고 인식한 만큼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민생 예산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돼서 추경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버렸네요.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전종덕 위원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 이전에 정보시스템 통합이라든지 공인·공부 일원화는 7월 전에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동의하시고 177억을 세우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반려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번 추경의 성격이……

○전종덕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 가지고……

어제 ‘성격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추경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 사업입니다. 국가가 최초로 행정 통합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를 세우는 예산인데 저는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아시다시피 자본 쪽 지출이 아닌 일반행정의 지출이 가능할까? 국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573억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 통합이나 공인·공부 일원화 비용 213억은 꼭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행안위에서는 그래서 177억을 반영해서 예결위로 올려 왔습니다.

○전종덕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213억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살펴겠습니다마는 이미 비슷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경제부총리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으로 지배력·결정력을 가진 사람하고, 진짜 사용자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하고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개정해 가면서 사용자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PPT 지금 보시고요.

정부 8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62개의 기관 중에 51곳이 사용자성 인정을 법적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무려 16억 18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교섭은 네 곳만 응했고요. 교섭을 회피하고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 위원회에 의뢰하거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법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노조법 무력화를 위한, 교섭 회피를 위한 꼼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꼼수를 썼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들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이냐 부분의……

○전종덕 위원 장관님,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적절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내용이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국가재정법상 효율성과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국가재정법 45조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 취지를 이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 위법입니다. 또 국가재정법에는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이것 저는 장관님께서 전수조사 하시고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국가도 모범적 사용자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공공기관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노동부나 관계부처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공공기관 342개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노동위원회에서 7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사용자성 인정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나 인력 운영, 업무 통계와 같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 사용자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평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지금 경영평가 기준이 재무 성과나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데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책임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지표에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이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항목에 넣어서 책임 이행을 잘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그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이렇게 공공기관이 범망을 피하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이나 교섭을 회피하거나 예산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 출신의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해협을 이제 다

닐 수 있게 됐는데 호르무즈해협에 2000척이나 되는 배가 있고 평상시에도 한 135척 정도가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냥 자유로운 항행이 아니라 이란군과 조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척의 우리나라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통과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노력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으신지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 26척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중에서 5척이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또 다른 나라에 가고 하는 쪽이고, 5척 중에서 4척은 석유고요 나머지 1척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이란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선박 빼 올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으신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기름이 다 비축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언제까지 기름이 비축돼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지금 비축유 이외에, 저희들이 한 5월까지의 비축유를 제외하고 1억 9000만t 정도가 있거든요, 정부·민간을 합쳐 가지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부장관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질문하면 일본은 내년 초까지 석유가 이상 없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전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하여튼 비축유를 제외하고 지금 한 5월까지의 사용할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배준영 위원 지금이 4월인데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비축하고 계시다, 글썄요 이제 적절한 대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비축유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

○배준영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 CSIS에서 얘기하는 비전투국 중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좀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휴전은 됐지만 전망이 꼭 밝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유 최고가 제도를 해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게 4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쟁 상황이 정리가 돼서 최고 유가 제도를 조기에 종료하게 되면 불용 처리해서 다시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손실을 계산해 봐야 되는 과정이라 가지고 일단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남을지 안 남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원칙은 불용 처리하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집행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귀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배준영 위원 그래도 안 써지게 되면 다시 국고에 귀속돼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건 불용 처리……

○배준영 위원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세를 활용을 안 하셔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유류세가 지금 30%인데 되게 찢끔찢끔 내리고 있는데 세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석유 최고가 제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세수가 적게 들 수 있고, 사실 최고가 제도는 아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투명하지 않은 계산 결과를 통해 갖고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급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공급이 없게 되면 사실 공급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안 써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기재위원 할 때 법을 개정해서 50%까지 탄력세율을 높일 수 있는 걸로 해 갖고 저희가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고유가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히 최고가 제도처럼 그냥 정유사에 국민의 세금을 퍼 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감내하고 더 오르게 되면 정부와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감내하는데 이게 좀 왜곡된 제도라서 제 생각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하는 법안을 제가 냈는데 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과거에 유류세를 인하한 것을 보니까 유류세는 공급 단계, 정유사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데 주유소 단계까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차적으로는 정유사에서 공급가격을 제한했었습니다.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온 거는 한 60불, 70불 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90불, 100불 때로 가격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최고가격 한 것은 저희들은 그런대로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유가를 안정화시키는 효과에 기여했다고 보여지고요. 2차에서는 유류세까지 인하해 줘 가지고 또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총리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총리님이 저랑 같이 지난번 21대 국회인가요, 유류세 탄력세율을 70%, 완전 해제하는 안까지 내셔서 저랑 병합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여쭙보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하여튼 잘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통합 안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 위원으로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는 난리인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노조에서 반대 성명을 냈고 한국공항공사 노조에서는 찬성 성명을 냈고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모르쇠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지방공항 얘기도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왜 지방공항과 인천공항을 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번 총선 때는 대통령께서 후보자로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통합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찬성하는 논리가 1년에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 흑자를 다른 공항에 나누자 이런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을 통해서 새만금공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그리고 울릉도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다른 공항을 건설하는 데 3조 3000억 원 이상의 계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항 통합이라는 게 인천공항을 더 튼실하게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내 가지고 그것을 세어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합쳐 가지고 나누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 이게 전혀 다른 공항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안 했을 때의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공기관이고.

부총리님, 김천이나 나주나 진주나 공기업들 왜 보냅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에 공공기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42개 중에 인천에 3%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마저 다 빼 가고 이렇게 한다니까 첫 번째, 인천시민들이 용서 안 하고 두 번째, 인천공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쇠퇴하게 해 가지고 국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고 지방선거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전광석화와 같이 할 거라는 굉장히 큰 심증을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총리로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철회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저희들이 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지난 겨울 예결위에서 저희가 공항 지역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대규모 재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은경 장관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라든지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공항 인근에 영종의 테니스장에서 한 분이 심정지로 코마 상태였는데 42분 동안 24km나 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가 돌아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영종 지역, 공항 지역에 949건이나 되는 KTAS 1·2 사건이 벌어집

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김윤덕 장관님, 제가 국토부 국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TF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제안하고요. 지금 인천공항의 예산이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라고 전향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TF를 이뤄 가지고 합치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님,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도와줍니다. TF에도 안 들어옵니다. TF에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검토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맨날 검토만 합니까? 지난 5년 동안 검토만 했습니다.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TF에는 참여해서 지역의 현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참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공항공사 자산이라든지 이익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영종 지역이나 공항 지역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천공항공사법을 바꿔야 되고요 또 의료법을 바꿔서 인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건도 있고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일단 TF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종구가 독립하면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구는 인하대병원이 있는 내항 부분하고 영종이 합쳐 있는데 이게 나뉘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종만 나뉘면 의료취약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살펴보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아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 그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준영 위원 신청했으면 안 내 주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재정 당국의 승인을 못 받아서요.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 재정 당국의 허가를 못 받아서 못 내 주신다는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배준영 위원 그러면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뭐……

○배준영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의지는 있지만 저희들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구가 신설되면 관공서나 여러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복지·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부동산등기라든지 하수구 관리, 긴급상황 시 대처를 하는 이런 기본 행정망 그리고 기본 안전망을 갖추는 게 저는 민생안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한 말씀입니다.

○**배준영 위원** 제물포·영종구·검단구가 올 7월에 신설되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법도 개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저 개정안과 같이 이번 추경에 실렸으면 했는데 이번에 실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안된다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당장 7월 1일 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우선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대책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7년, 이번 7월에는 좀 늦더라도 그 후속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광진구를 출신의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교육·노동·행안·환경, 시간 되면 복지 정도까지 여쭙볼 거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의장님이 준비하신 떡과 식혜를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쉼 시간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서.

먼저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여쭙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법이 통과가 돼서 많은 분들이 박수도 보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곤 합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적정 식수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당장 교육청이 환기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또 예결특위를 매번 하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국가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개선하자는 방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6개 교육청은 25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6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살펴보니 완료된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7년까지는 17개가 다 완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로는 그중에서 글썽요, 완료할 수 있는 곳 뭐 한 두세 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

다.

그러면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예산도 다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규모가 크긴 하지만 ‘23년까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23년 당시에 목표를 세워 났는데 현재는 어떠냐? 33년까지 하겠다고 보고가 왔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27년·28년 뒤 이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2033년입니까?

아니, 국가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조리실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크게 결의해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법도 통과시키고 다 같이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작 이것을 해야 할 교육청들은 이렇게 더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교육청 교육감님들한테 제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니 교육부장관님한테 제가 여쭙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더딤니까? 또 교육감도 하셨었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처음에 2023년도에 국회에서 권유도 해 주시고 그 관련 부서가 같이 해 가지고 환기 설비 개정을 위한 TF를 꾸려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레 가지고 그때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고민정 위원** 했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3·4·5·6·7 그래서 대체적으로 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학교가 대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 때마다 보니까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사비를 매년 목표 세우고 매년 20%씩 해 나가서 27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대개 학교당 한 1억 정도 처음에 들어가고 개선, 그러니까 새로 할 때 1억 정도이고 조금 고치면 되는 건 한 3000 정도라고 그래서 평균 1억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게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2억, 3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래서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 고용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 또 두세 군데가 더 있는데 거기는 조금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다고 했었습니다. 늦어져도 29년, 아무리 늦어져도……

○**고민정 위원** 아, 이제는 못 믿겠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거의 다 됐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고민정 위원** 이제는 계속 이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회로 뭐가 들어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이 다 하세요. 국회의원들도 합니다. 왜 그러냐? 약속이 지켜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교육부장관님을 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구조와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느냐? 수억 원의 예산을 하겠다고 발표는 매번 하지만 그거를 다시 점검해 보면 빈 구멍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예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0.79%, 마치 이게 대단한 요술 항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왜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부에서 이거 다 못 하나? 모든 부처가 다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걸 저는 교육위 간사로서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조리실에서 폐암으로 죽어 가는 노동자들을 살리자고 여러 방안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 부족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계속 20.79% 그거 너무 많다, 없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보다 무조건 주고 추경이 되면 또 증가되고…… 이번에도 4.7조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교육청이 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곳들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 가운데는 교육부밖에는 없습니다.

책임지고 해 주시겠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실제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셔서 법이 개정되고 실제로 학교 급식시설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교육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곳이 혹시 빠진 데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부터 계획대로, 적어도 2027년 약속된 때에 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는 등등 해서 가능하다면 노동부도 같이 하시자 그래 가지고 TF를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고민정 위원** 맞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TF를 꾸려 가지고 실제로 같이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김에, 오늘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도교육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려가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환기 설비 개선 관련한 일들을 한번 더 강조해서 무엇보다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발 좀 그래 주십시오. 교육감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 텐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관련 질의를 드렸었어요.

가이드라인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침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이……

○**고민정 위원**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정 위원** 현장은 다녀오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고민정 위원** 다녀오시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침은 안 정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까 교육부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늦어지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부적격 요소가 한 18%에서 20% 내외 정도 추계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급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조리를 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에어컨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는 엄청 차갑고 정작 그 열기를 식혀 줘야 될 곳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온몸이 땀땀 범벅이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예산집행 됐지요. 그리고 교육청은 실행은 했지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얼마큼의 규모가 필요하니 그냥 갖다 때려 넣어’.

현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풀렸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서든 현장 노동자들 목소리가 들어가는 구조는 장관님께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 특별한 내용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더 소통 강화해서 가이드라인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한 300개 정도 학교를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예산이 잘 쓰였고 잘 설비가 돼 있나 했더니 그 가운데 몇몇 군데들은 부적정하다 하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과 강원은 무려 70%가 넘게 부적정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00개가 아니라 더 늘리게 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0개는 전체 학교 중에서 한 6%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치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올해 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 도표를 보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될……

○**고민정 위원** 아마 그 숫자를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교당 16만 7200원이라고 저한테는 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니까 이 숫자를 좀 더 늘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을 하나 더 보시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정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청들은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잘한 데가, 인천·광주·부산 이런 데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이란 대전은 지금까지도 그냥 예정입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할 생각이신가 봐요. 학생들은 선거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뭔가 체크를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 차라리 시공 후에 감리를 좀 의무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이렇게 강원처럼 그냥 뭉개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일정 기간을 딱 정해 주고 마감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변화들이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안들을 좀 고용부에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안전일터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직접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는 걸 신고하게끔 하시는 건데 여기에 안전설비 미비 분야도 좀 신설을 해 주시면 급식실 조리사들이, 고용노동부가 다 일일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니 당사자들이 지금 여기는 뭐가 이상합니다라는 걸 신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용노동부가 일을 처리하시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두 분께 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좀 전에 교육부장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 이런 곳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가 예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랬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의 칸막이가 거기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TF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또 실무적으로 챙겨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민정 위원** 안전부장관이기도 하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것도 역시 원래는 서울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안 계셔서…… 그런데 서울시민으로서는 당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제가 안전부장관님께 여쭙는 겁니다.

한강 유람선이 좌초돼서 무려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한밤중에 구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한강버스에서도 이미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나’.

서울시는 매년 점검했다고는 합니다. 저한테도 보고하기로는 수심의 문제가 있으니 준설작업 하겠다, 그래서 준설 다 했다 하고 저한테도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배는 걸려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도 사고 원인 조사라든가 또 예방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발하고 난 뒤에 선상에 대한 위법 처리도 즉각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정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아마 4월 중에 행안부가 다시 한번 조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했는지를 다시 또 관리감독을 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가 유·도선법도 있고……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 하저 같은 경우에 유량 변화에 따라서 항로의 수심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람선 이든 한강버스든 충분히, 초음파 장비 같은 것을 다 장착하고 항로를 찾아다니면 되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운항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장비, 안전·계측장비를 반드시 장착하고 운항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고민정 위원** 지도를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본 법에 의하면 행안부는 이런 사고가 생겨도 직권조사 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직권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제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이라 송구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박홍근 장관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 혹시 시간이 되면 질의를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추경을 하는 와중인데 신속성이라든가 또 적절성에 대해서 저도 정부의 추경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전반을 살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선 산업은행 펀드에 있어서, 정책금융펀드에 있어서 RWA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RWA가 저도 사실은 법조인이라 좀 생소한 개념인데 PPT 화면을 보시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게 은행건전성 할 때, 은행들이 투자를 할 때 위험 가중치에 따라서 위험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자기자본의 얼마까지 적립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사업에 투자라든가 대출을 할 때, 예컨대 100억을 대출할 때 이것이 위험성이 높으면 그 은행 내부에다가 건전성을 위해서 혹

은 담보적 성격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비율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국민성장펀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한 펀드인데요. 예컨대 지금 보니까 투자액이 50조이고 대출액이 100조인데 RWA를 100%로 하니까 은행 내부에서는 적게 쌓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적게 쌓으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적절한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펀드를 똑같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 그게 투자액이 54조 원이고요 대출액이 175조 원이 되어서 기존에 이런 정책금융대출도 상당한데, 그런데 이것의 RWA를 400%로 잡으니까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들이 4배를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산업은행 정책금융펀드의 돈이 이 국민성장펀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축효과 혹은 풍선효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인 투자의 증가보다는 이쪽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산업은행 정책금융펀드도 또한 100%로 똑같이 낮춰 주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생산적 금융의 본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AI라든지 데이터센터 이런 것……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 방산에 하고 있고 제가 그 산업은행 현장에 가 보니까 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PPT,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설명을 받고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또 손실을 정부가 밑에 좀 깔아 준다고 그러는데 손실을 분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400%가 아니고 100%로 했고요.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에서 기존에 400%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50%가 원칙이 되도록 이렇게 낮추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250%로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하셨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지금……

○김승원 위원 그러면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금융위에서 아마 그것을 생산적 금융 합리화 방안으로 작년 9월 달에 마련은 했고요. 지금 시행은 저희가 하고……

○김승원 위원 벌써 시행은 되고 있고, 그런데 RWA를 250%에서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러니까 250%보다 더 낮아지게 하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더 위험 분담을 해 주는 경우,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민들도 여기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고……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반적으로는 400%에서 250%로 낮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또 더 강한 리스크 분담을 해주게 되면 100%로 떨어지는……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산업은행 정책펀드가 54조 그다음에 175조 대출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자금들이 국민성장펀드에 풀림현상으로 가 버려서 이쪽의 총액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250%를 더 낮출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정부가 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많이 풀려 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분야는 또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그 상황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종합투자계좌 IMA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4월 달에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서, 국내 중소·중견·벤처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IMA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정책목표의 핵심 수단이 고객 예탁금을 국내 기업금융 관련 자산, 회사채·기업대출·인수금융 등에 70% 이상 운용을 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상 IMA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IMA 사업자는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7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부동산 투자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운용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고 IMA와 발행어음 합산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A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거대 증권회사, 금융기관만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가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알기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6개 대형 금융기관이 할 텐데 그런데 본래 정부에서는 이 IMA로 모인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이것을 해외 사모대출에

투자하는, 거기에 자금을 편입시키는 그런 증권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점을 갖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IMA 총 모집금액 1호부터 4호, 2조 5590억 중에 해외 사모대출에 5034억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묶여 있다면서요, 일부 자금이? 부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감독원하고 해서 저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IMA가 사실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라 아마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 계좌도 개설하고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외 사모대출에다가 자금을 넣으면 지금 벌써 환매제한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아폴로, 아레스, 블랙록, 모건스탠리, 블루아울 등 세계 최대 사모대출 운용사들이 일제히 환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저게 리스크, 정부에서 작년 이후에 좀 우리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배치가 되는지 어쩐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크도 줄이고 또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벨기에 채권에다가 투자했던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원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다행히 부총리께서 좀 도와주셔서 금감원에서 피해 회복률을 높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정이 돼 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해외 사모대출에 국내 자금이 또 빠져나가면 예컨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번진 불이 국내로 넘어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벨기에 투자자들처럼 그 피해 때문에 절망에 빠져 가는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당초에 하는 게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품이 당초에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을 달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더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결국에는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아마 여기 미래에셋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금 미국 시장 부실을 한국 시장으로 옮겨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라, IMA를 받을 만한 적격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는, 개선 없이는 그런 적격이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도 하여튼 금융위에서도 한투에다 줬어요, 자격을. 그런데 한투가 지금 25%를 또 저렇게 해외에다가 넣어 버리고 환매 중단 사태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 그러니까 금융기관과도 구체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하고 또 감독원 또 금융회사하고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초고빈도 매매(HF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판사였을 때 2006년도에 이 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투자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권시장에 접속을 해서 자기들은 빨리 선취하거나 아니면 팔고 나오거나 그런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접근함으로써 예컨대 시세 변동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예컨대 기관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일반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없어졌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초고빈도 매매 주요 불공정 사례를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올려 드렸는데요. 이것은 거의 사기성 매매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푸핑(spoofing)이라고 해서 체결 의사 없이 대량 허수 주문을 제출한 다음에 시장 수급을 왜곡하고 그것을 그냥 취소해 버리는, 그것을 모르고 일반 국민들은 저게 되나 보다 하면서 따라갔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레이어링(layering), 참 명칭도 복잡합니다. 여러 가격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허수 주문을 쌓아서 가격 방향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뒤에 반대 방향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

또 프런트 러닝(Front running), 이게 제가 예전에 재판했던 것 같은데 기관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정보를 밀리초 단위로 속도 우위를 이용해서 확 사 버리거나 확 팔아 버리거나, 일반 국민들은 거기서 완전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손실을 보는……

모멘텀 점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불안정할 때 한국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을 해서 예컨대 폭락을 할 때는 그 폭락을 더 부추기는, 그래서 평소보다 거래량을, 초고빈도니까요 1초 만에 수천 건, 수만 건, 수십만 건이 거래가 되니까 평소 대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예컨대 12.06%까지 한꺼번에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증권거래소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증권 거래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왜냐? 초고빈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저거 보면서 옛날에 빨리 갔을 때, 당첨될 때 하이파워 컴퓨터를 써 가지고 빨리 되는 사람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개인이나 거래 간에 차별은 없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이파워를 켈리티 면에서는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김승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저희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월 거래대금이 예컨대 6797조 원인데 2월 한 달간 초고빈도 매매를 통해서 된 게 자그마치 3927조입니다, 57%.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근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 이미 기관들은 이걸 통해서 다 팔아 버리거나 사 버려 갖고 그 많은 이익을 더 선취한다는 거지요, 손실을 피하기도 하고. 이것은 완전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불공정 시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주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한국증권거래소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이것 잡아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시간이 모자라네요. 사실은 농림부장관님께 농민들이 무기질비료, 농사가 시작돼서 비료를 쳐야 되는데 지금 비료값이 상승이 돼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이게 나중에 또 농산물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160억인가요? 이거 증액해 달라는 건데, 박홍근 장관님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김승원** 위원 벌써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소위 단계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 총리께서는 안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총리님 잠깐 현장 회의가 있어서 아마……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원래 총리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총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총리께 먼저 현안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서해수호의 날이 있었잖아요. 서해수호의 날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서 천안함 장병 유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유가족분들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라고 하는 거 혹시 부총리께서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뉴스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시에 북한이 사과를 하란다고 하겠냐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것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은 혹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과를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토를 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재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2월에 국내 민간에서 무인기들이 북한에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과였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틀 전에 북한의 김여정이 답변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언론에서 제가……

○우재준 위원 김여정이 ‘이재명 유감 표명에 대범한 자세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때 대통령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우리가 또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실제, 사실관계를 했을 때 정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천안함 장병들이 폭침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 요청도 못 하는데 우리 민간인이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물풍선 날아왔지요. 오늘도 보니까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우재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북한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게 굴욕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대통령께서는 좀 대범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듭니다.

○우재준 위원 이게 대범함의 문제입니까? 우리 장병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못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하는 게 이게 대범함의 문제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북한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도리로서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우재준 위원 저는 이게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훈이라는 건 단지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훈은 명예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명예를 지켜 주는지 그게 저는 보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대통령께서는 국민 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대화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편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요. 무슨 방북하기 위해서 대북송금하고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당당한 외교의 원칙을 이재명 정부 전반에서 좀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는 하여튼 국민 편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하고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경제 관련해서 현안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1300조 원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우재준 위원 작년에만 국채를 130조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채 전체의 10% 정도를 작년 한 해에 발행했더라고요.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 너무 지나치게 속도가 빠른 것 아닙니까, 국채 증가의 속도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 예산은 그전에 결정된 부분이고요. 그나마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좀 살아난 덕분에 결산치로는 7조 4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그 숫자도요.

○우재준 위원 우리나라 국채 증가 속도를 보니까요 전 세계랑 비교를 해 보니까 예전에 2018년에 불과 30위 정도였는데 2026년 19위로 8년 만에 열한 계단 상승했더라고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아주 빠른 순위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지금 국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초과세수가 더 건히게 되어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초과세수가 더 건히게 되어서 지금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초과세수가 건히서 추경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을 감안해서 추경은 하는데 다만 다행히 초과세수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 작년에 그렇게 130조라는 역대 최고의 채무를 발행했으면 올해는 초과세수가 있으면 좀 갚는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안 갚을 수도 없어서 일부는 국채를 갚았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지만 금년의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서 겪고 있는 택배업자라든지 화물·자동차나 이런 국민들의 절박함 앞에서는 우선 불의, 불은 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제가 만약에 절박한 사업만 이번 추경에 담았다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태양광 관련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 30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태양광 사업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태양광 그 부분도 지금 워낙 석유에 디펜딩하는 그런 경제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재생에너지로 가자……

○우재준 위원 아니, 태양광 사업은 지금 자금을 투입해도 모듈이나 이런 장비들을 사와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려고 하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데 그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데서 그만큼 시간이 또 걸려서……

○우재준 위원 그런 논리면 지금 원전을 짓는 거랑 뭐가 다른니까, 그 돈으로? 지금 원전 추경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니까? 오히려 유류세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유류세 인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세출을 통한 직접지원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정책을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재준 위원 수입원 다변화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원유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책.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현재 산업부장관이 여기에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중동 이외의 국가에 가서 수입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재준 위원 예산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석유 쪽은 일단 수입 다변화해서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또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지금까지 다변화를 시도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동안에는요, 중동이 정상적이라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게 물류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봤을 때 그러면 저 남미나 또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든지 또 SMR이라든지 원전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정책의 대전환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우리나라 석유의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우재준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 수입원을 다변화하자라는 데 좀 더 총력을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한다면 원전과 다른 것들도 같이 저는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태양광 사업에 이 틈을 타서, 이 추경하는 틈을 타서 너무 큰돈을 지금 추경한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SMR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수소라든지 또 다른 쪽도 하고 있습니다, 풍력을 한다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도심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환율이 급등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전쟁 요인이 큼니다. 오늘은 휴전이라고 하니까 15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재준 위원 물가도 급등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물가는 사실 석유류 관련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난달이 2.2%였습니다.

○우재준 위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한참 오르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

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게 통화 확장 정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채를 무한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10% 정도나 발행했지요? 역대 규모의 10% 정도를 작년에 발행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현재 우리 국채 발행은 선진국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기축 통화국을 제외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국채 규모가 적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국채 규모를 적다 많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어차피 저희들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돈을 어느 분야에 써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재준 위원 저는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돈을 풀면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간다. 그다음에 물가도 상승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경제학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돈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그게 물가라든지 환율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여러 가지, GDP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영향이 전혀 없다 얘기는 못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영향보다는 돈을 이렇게 쓰더라도 AI 대전환이라든지 초혁신경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리고 예산처장관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예산 배정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게 원칙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적재적소, 불요불급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게 예산 배정의 기준이 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 배분 운용의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재준 위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되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누군가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이 사법개혁을 비판한다든지 더 나아가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시라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예산이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아직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정치적 논쟁은 소신의 영역이고 각자 어떻게 헌법 질서를 해석하는지 이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겠지요.

TK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우재준 위원 TK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필요성 이런 부분들 많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부터 공약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랑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공약을 했고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도 들어 있고 또 타운홀 미팅 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는지가 이 사업의 추진에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이 사업의 타당성 절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재준 위원 선거에 누가 되는지가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 않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결국 그동안 국회에서도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기부대양여의 원칙하에서 향후에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 원칙이 지금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합의된 바입니다.

○우재준 위원 부총리께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TK 신공항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절차 협의 중에 있고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공자기금에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는 논의 중이었고 협의가 결론이 난……

○우재준 위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인데요. 지으려고 하는 데 이전 하는 쪽이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요 옮기는 쪽에서는 또 수익이 적게 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재준 위원 향후에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지역민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니깐요 정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없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예산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정무적인 판단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업성을 보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어제와 같이 저녁 식사 전까지 휴식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실 때 질의하실 대상 국무위원들을 미리 지명해 주시면 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존경하는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우선 재정경제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이후에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짧은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함은 한쪽으로는 중장기 대외환경들을 계속 살펴 나가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전략들을 세우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보시다시피 한국은 고요한데도 해외에서 무슨 일이 나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는 게 하나의 어떤 지구촌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지호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님께서서는 그러면 사실 전 지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한국 증시에 영향이 오고 그게 우리 기업들 자금으로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곡물가에 영향이 가고 그게 우리 밀가루로 오고 밀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글로벌 이슈가 나의 이슈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유가가 흔들리는 것은 복잡한 국제질서 안에서 전쟁들이 큰 규모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에 대한 침공들 그리고 이란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사실 그 빈도나 규모 면에서 계속 심각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마도 국제질서들이 지난 20~30년간 이어졌던 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들어가고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덕주의를 가지고 국제질서들 이끌어 왔었던 것들에 굉장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들은 아마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쇄적인 충격들, 아마 식량 위기도 있을 거고 경제적 충격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연쇄 충격들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세계에서 우리는 아직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왔을 때 지금 같은 분쟁에 대한 가능성들이나 경제질서들

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들은 볼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요인들이 하나의 100% 올 미래로 준비되고 있고 그중의 일부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닥쳐온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AI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요인이자 위기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런 다중복합 위기가 왔을 때 냉정하게 살펴보면 전 세계는 아직 이런 회복탄력적인 시스템이, 이 위기를 겪어 내서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팬데믹 하나로도 전 세계가 이렇게 휘청거렸는데 어떻게 기후나 이런 연속적인 분쟁들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대안이나 기회로 글로벌 기회로 찾아온 것은 AI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질서가 지금 균열을 내고 무너져 나가고 있을 때 AI가 또 다른 형태의 생산성으로 인해서 국가 간에 인간 지능 시스템이 만들었던 격차들을 바꾸고 국제안보 질서들을 바꿔 나가는 이 과정은 이제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적 미래가 될 수 있지만 그 핵심 열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국의 위치가, 특히 거시경제를 담당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계실 거라 기대를 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가, 이제 미국이 이런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형성하겠다는 것에서 발을 빼고 있고 오히려 균열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전에 이런 국제질서와 글로벌 어젠다를 생산하는 기능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안보 문제의 위기 때문에 훨씬 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의 눈은 사실 한국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을 향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상 이런 국제적인 어젠다들을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사실 손을 꼽을 정도로 적게 만들어져 있고 그때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총리님과 저희가 같이 가서 유엔의 6개 기구들과 글로벌 AI 허브라는 어떤 연합체를 만든 것은 시대적인 기대들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국가가 손을 내민다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엔 역사에서 조금 희귀하게 6개 기구들이 연대를 하고 또한 3개 기구들이 더 연대를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한 축으로 그 연대를 만들어 낸 국가가 기존의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국가가 아니고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그걸 만들어 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대적인 흐름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AI라는 굉장히 주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서는 전 세계 질서들을 살펴 나가면서 한국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와 기대에 연관된 이런 국제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어젠다나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확충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이 가진 경제적 위치, 글로벌 거시경제 안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 중심으로 크게 진전되고 있는 LLM 하나에다가 그리고 AI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저는 일상의 AI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퍼지컬 AI다 물리적 AI다 이러는데요 물리적 AI가 한국이 AI 쪽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 갖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지요 이차전지도 생산하고 있지요 제조도 뛰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서 유엔기구들하고, 유엔기구들의 AI를 적용한 에이젠틱 AI라든지 이런 쪽에 또 거기에 맞는 SL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협력할 가치가 있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이 유엔에도 기여할 뿐만이 아니고 유엔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의 에티크스(ethics) 문제라든지 AI 가이드라인 문제라든지 AI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은 충분히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엔하고 얼라이언스하고 더 나아가서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또 ADB, IDB, EBRD, 이런 글로벌 MDB들하고 같이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저개발국에서는 AI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미래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조건을 잘 갖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엔이 사실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진 힘은 사실 미국과 유럽 같은 회원국에서 나오는 힘에 기반을 해서 정치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들이 유엔으로 투사돼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좀 발을 빼면서 큰 공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세계은행이라든지 현재 다른 형태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유엔이 바깥에서 국제 연대체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이 가진 힘과 또 한국이 가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 글로벌 민간영역들이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짜야 될 위치에 와 있고 그 부분들이 유엔기구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주요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사실 한국이 글로벌 표준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위치에 와 있고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한쪽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산업, AI 경제와 사회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델들이 AI와 함께 확산되어 나갈 수 있고 고용 부분, AI와 연계돼서 온 고용계 충격들에 대해, 노동 충격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대응을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주요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산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3차 산업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주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전 세계 대부분의 GDP를 구성하는 3차 산업의 AI 전환 과정들을 일종의 공공영역에 대한 리더십으로서 한국이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들이나 아니면 공적 기여들은 그런 ODA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같으면 우리 심평원이나 건보

공단이 들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또 고용 문제 이런 부분은 경사연뿐만이 아니고 경사노위,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 ODA 자금 중 EDCF 자금을 활용하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EDCF도 AI 또는 문화, K-컬처 이런 쪽으로 재원을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 다시 재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면 진짜 한국이 AI 대전환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조데이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빅테크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고요. 스탠퍼드에서도 한국하고 같이 연구를 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진짜 한국에게는 AI 시대 대전환의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차지호 위원 부디 한국이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룰 표준들을 만들어 내고 거버넌스를 리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이득과 연계되는 부분이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한쪽으로 이런 역할하자 한쪽으로는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말씀 주시지요.

○차지호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분당선 연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자체 사전타당성조사를 했고 2021년도에 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는데 26년 1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재선정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조사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분당선 연장 문제는 경기 남부의 굉장히 핵심적인 삶의 질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길에서 하루의 막대한 시간을 버려나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가진 생산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철도 분당선 연장 문제는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예타 신청 과정의 쟁점들도 실제 예타를 해 보면 결론이 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시행하게 되는 과정들을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재검토해서 예타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저희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예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나, 구체성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시급하냐, 그다음에 국고지원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타당성 용역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는 표정속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끝나는 종점까지를 중간 지점의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전체 소요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 50k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간당 45km 정도가 나온 모양입니다. 거기서 좀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국고지원에 있어서 비율이 광역철

도나 도시철도나에 따라서 70%나, 60%나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무부처랑 이런 예타 규정에 부합하는 요건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보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부는 표정속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더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많은,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주민들이 가진 고통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길에 수많은 시간을 잃고 생산성을 잃어 버리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들이 수도권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주민들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의를 하시면서 AI 기본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향하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4세대 의료시스템 모델이지요—이런 식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AI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양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이 가진, 특히 지필공에서 의료의 소외되는 문제들을 AI라는 차세대 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주요 의료시스템과 의료산업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엔기구들, 이번에 들어온 유엔기구들이나 WHO에 AI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함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AI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내 문제도, 국내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필수의료 영역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국내의 수요도 분명히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이런 AI를 의료에 접목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기술들을 동남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하게 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중저 국가에서의 의료 문제,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섬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나라랑 같이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 의료 보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저희 생각에는 결핵이나 말라리아나 항생제 내성 같은 글로벌한 보건 이슈도 AI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HO하고 협력해서 국내 문제 또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 전환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지호 위원 한국이 가진 AI가 전 세계 생명들을 살리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차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에 좀 여쭙보겠습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 합성섬유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 그리고 또 조선소에서 철판 절단할 때 필요한 에틸렌 가스까지 전부 이 NCC 공정, 나프타 크래킹 센터(Naphtha Cracking Center)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것 다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나프타 공급 부족이 전반적인 제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사실 이 NCC 설비 가동률이 60% 밑으로 내려가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또 한번 가동을 멈추면 다시 재가동까지 한 달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 가동이 멈춰서는 안 되는 설비인데 지금 우리나라 나프타 업계의 평균 재고,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수급 조정 요구를 시행하면서 국내 공급을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안 거기에 그 수입단가 차액 지원 추경안이 지금 469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먼저 제가 여쭙본 것부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업계 평균 나프타 재고가 지금 몇 주분이 남아 있습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한 이삼 주분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한 이후에 운송하는 데 또 이삼 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계약하고 당장 도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나프타 관련해서 4694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수입 물량 213만t 그리고 톤당 22만 원 지원단가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13만t이라는 계산이 공장 가동률이 하향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월 71만t 기준으로 계산한 거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자료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런데 제가 업계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목표생산량을 월 88t까지는 올려야지만

국민들 불편이 없을 수 있다라는 요구가 있고요. 또 단가 기준금액도 3월 12일 추경 편성 시에는 톤당 1087달러였는데 4월 2일 기준으로는 30%가량 더 올라간 1328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프타 외에도 기초유분까지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자원을 확보해야 원활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면 이런 계산이라면 4694억 원의 추경으로는 나프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왜냐하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갔고 또 필요한 소요량 계산도 다소 더 필요하니까요—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4694억 원이면 나프타 확보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4694억 원을 계상할 때 필요한 나프타 물량과 나프타 가격이 추경 편성할 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고 가격은 더 올랐는데 그러면 4694억 원으로는 기대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충분한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물량에 있어서는 나프타 수요의 한 23% 증가가 필요하고 또 보조율도 현재는 50% 보조인데 한 80% 정도까지는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더 필요한 거지요? 4694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얘기 아닌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저희는……

○김상욱 위원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정안으로는 한 1.6조 원 그 정도……

○김상욱 위원 1조 6000억 정도가 필요하냐?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 가능하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관계 부처와 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나프타 수급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추경 편성할 때보다 더 많은 나프타가 필요하고 단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업 전반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이 나프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추경에서 일부 반영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 산업부의 예산으로 한 4700여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목적예비비에 담아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아마 그 물량까지 고려하면 2개를 합했을 때 한 1조가량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에 대한 확대 요구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단가가,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현재의 부분이 만약에 도저히 그걸로 우리가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안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나프타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나프타가 없어 버리면 NCC 공정 자체가 마비돼 버리고 그러면 플라스틱, 비닐뿐만 아니라 당장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 주시기를 장관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이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저희가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 보조율 문제는 저희가 3개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수입 계약이 체결된 구매금액하고 기준가격의 차액을 50% 보조하는 건데요. 과거 저희가 요소 문제도 심각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도 저희가 한 50% 정도 보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조율, 차액에 대한 보조인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프타를 사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가격이 그전보다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좀 더 올랐을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보조율을 80% 다 전액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일단 산자부 입장과 기획예산처 입장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요 나프타 공급의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부락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혹시 외교부에서 나와 계신가요? 나와 있지는 않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 발전소에서 발전한 이후에 송전선로를 통해서 수요처로 공급하면 송전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상욱 위원** 송전손실로 발생하는 에너지, 결국 에너지가 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말 아까운 에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전소 인근에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나 기업들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발전소 인근에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나 공장들이 가도록 좀 유도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더 공정한 일이고 또 그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고 이런 에너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

조적인 대응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동안 대한민국은 용도별로는 전기요금이 각각 달랐는데 전국에 어디 있든 같은 산업용 전기면 같은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비용이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역별 요금제 체제하에 발전의 집적도, 송전비용 또 국가균형발전지수 등을 고려해서 지역 요금을, 발전원이 가까이 있는 데는 더 싸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금체계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관련된 법령은 작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법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 세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산업용 전기에 관해서는 발전소 인근에 있을 경우에 전기 공급단가를 달리,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 특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금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장관님께서 관련된 요금체계 점검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은 지방에 있고 특히나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는 위험도 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이 길어지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송전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요구가 큰데 아무래도 발전소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지방에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유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다뤄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겠고요. 또 이걸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올립니다.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산업통상부에 다시 좀 여쭙보겠습니다.

나프타 관련해서 아까 여쭙았는데 자료를 한 번 더 보셨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업계 재고량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그것도 확인하는 중인데요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일각의 보도처럼 이삼 주 분량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운송을 한다 하더라도 나프타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 사실 이런 우려가 산업 전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깝게는 당장 시민들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어떡하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산업통상부 안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나프타를 주로 많이 수입하는 곳이 중동 쪽이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중동 외에 수입선을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유럽 몇몇 국가들도 한 일이 년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사관 그리고 상무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 위원** 나프타를 수입할 때 결국에는 이걸 중개하는 업체들, 무역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나프타 수요 업체와 물건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이런 나프타 공급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개업체들이 결국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추경 지원이나 아니면 방향성이라는 것도 실효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그 중개업체가 국내 업체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이쪽이 석유화학 허브기 때문에 그쪽에 국제적인 트레이딩 컴퍼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해외 네트워크 활용해 가지고 지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에너지 위기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리 많이 비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유도 그렇고 나프타도 그렇고 이런 필수적인 자원들은 많이 비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석유 비축기지가 있고 또 나프타도 여러 업체들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원유 같은 경우 우리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임, 중동 대비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운임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중질유 위주로 정유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설비 측면에서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변화, 원유 도입 지원 관련된 예산안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석유 비축기지에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유가 쌀 때 많이 비축했다가 이렇게 석유 공급난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쓰고 도리어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에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겨 버리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는 많이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덧붙여서 사실 러시아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상옥 위원 관련해서 외교부나 아니면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산 나프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한을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랑 얘기를 해 보면 이게 굉장히 숏 노티스(short notice)고 짧다 보니까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 그렇게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약간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위기, 이제 휴전이 되었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사상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장관님하고 해수부장관님하고, 총리님이 안 계시니까 부총리님 좀 계시고.

다른 분들은 가셔서 쉬셔도 좋습니다. 조금 쉬세요. 쉬시면서, 계속 저쪽에서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그거 하실 것 같은데 좀 쉬시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여튼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그리고 해수부장관님도……

환경부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대식 위원** 부산 출신으로서 축하드립니다.

박홍근 장관님이 대답해도 좋고 황종우 해수부장관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가 따로 따로 한번 문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섬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수만 개지요.

○**김대식 위원** 섬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세요? 3153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신안만 1000개라고……

○**김대식 위원** 신안 천사섬 이러는데 사실상 한 1500개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네이밍을 1400개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유인도가 461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81만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님, 추정안 1쪽에 보니까 추정 편성 배경으로 해운물류 비용 상승에 따라서 수출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글로벌 허브망, 공급망 불안으로 석유화학이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련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남 그다음에 충남, 강원, 경북 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산업의 위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계시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26조 2000억 규모의 추정안에—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도—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항만 종사자 지원, 하역업체 지원,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지원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청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의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해수부장관님 대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해수부장관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부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다른 분야들이 워낙 급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일단 정부안……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하위계층에 10만 원씩, 15만 원씩을 안 줘도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 국민이고 저래도 국민인데 81만 명의 섬 주민의 이동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해수부에서 적극성을 안 깨는가 모르겠어. 국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해수부에서 이것을 해야지 말로만 해수부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로만 지금 해운물류 위기라고 하면서 예산은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빗겨나갔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항만물류, 항만 배후 단지를 말씀 주셔서 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섬 주민과 관련한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객선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에 일단은 국가보조항로랑 적자항로를 담았는데 그게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반항로까지 107억 원을 더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예결위에 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꼭 좀 돼야 될 게, 한번 보세요. 교통의 물류 생명성을 유지한다. 이게 거창한 예산이 아니에요.

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 106억 원 편성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이번에 저기……

○**김대식 위원**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리젝트(reject) 당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아닙니다. 운항결손지원금을 상임위에 담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연안화물선 증유 유가연동보조금 638억 원, 이것 합쳐서 744억 원이 증액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상임위에서 반영이 돼 있고요.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PPT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연안여객선이—한국해운조합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건데—공급한 면세유를 사용하고 일반여객선 119척—119지요—유가 상승분을 전부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자체 부담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4월 면세유 공급가액 급등으로 인해서 여객선사 연내 499억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수부에서는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일단 피해가 될 수 있는 예상 부분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한 달치 107억 원을 먼저 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정부가 막아야 할 것은 바로 항로가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만 명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섬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통 편리는 유일하게 지금 연안여객선이고 하는데, 이게 유일한 대중교통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하지만.

주민의 교통편의 이것은 국가에서 최소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사들한테 다 부담하라 이러면 ‘우리 적자 나니까 못 하겠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면세 혜택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고 거기에다가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를 대부분 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김대식 위원** 중유도 쓰지, 중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리고 주요 항로 운영선사 얘기는 저희가 보조금 증액을 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조항로 운영 여객선사에게 결손보상금 확대하는 것을, 본예산에 한 250억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29억 정도를 담았는데 이게 전체 한 100개 정도의 항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의 42개의 항로에 대해서 국고 지원하는 내용이 29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58개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항로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장관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 요구 조건이 오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제가 예산소위입니다, 부총리님.

임기근 차관님, 제가 소위인 줄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소위 가서 이것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에요. 전국에 다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본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적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른 42개와 함께 저희가 열어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유류비 급등비 이것은 여객선사에 모두 떠안기면 여객선사들은 ‘우리가 못 하겠다. 이것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결국 피해는 섬 주민 81만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우리가 다른 부분이…… 우리도 그렇지요. 정부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소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코로나 시기에도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핵심 부담은 경유가 아니고 중유, 4월 과세 이후 중유 가격 급등, 화물선사는 연내 1593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해수부장관님,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영세 선사들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64.2%에 이르는, 업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운행 중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 중유는 추경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유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부안에 반영이 못 났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정부는 경유는 105억 51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왜 연안화물선의 주 연료인 중유를 추경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경유보다 중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안화물선은? 어떻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주로 대형 선박이나 대형 선사가 중유를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선은 경유 사용을 주로 한다라고……

○**김대식 위원** 아니에요. 지금 경유 사용인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중유가 좀 많습니 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요구하니까 기획예산처 답변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택시 LPG, 전세버스, 육상 수송까지 요구될까 우려해서 이것을 뺐다 이러는데 이것하고 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더 타격이 큰, 더 취약한 그런 소형 화물선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화물차나 노선버스와 같 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한 105억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형 선박이나 대형 선사 이런 게 주로 예인선, 원자재 운반선 이런 걸로 많이 쓰인다는 건데 이런 건 주로 중유를 쓴다는 거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차이를 좀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설계할 때 이 자체를 기 획예산처에서 놓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요?

임기근 차관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이게 실제 피해가 없는 업종은 지금 없는 거라고 보실 수 있 고요. 일단 급한 데 위주로 여기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고, 이런 급한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업체의 규모나 화물선의 규모 그런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씀드리겠습 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짤 게 아니라, 그런 처지가 돼 있다 이렇게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런 부분을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무부처, 필드에서 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통체계를 누가 제일 많이 압니까?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국무위원님들 계시고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우리보다도 사실은 택 시기사들이 더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의 이야기를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만 우리 가 관심을 가졌으면 들어갔을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제가 주장을 하면 반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연안여객선 그리고 화물선 관련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고, 버스는 되고 택시는 되고 화물차는 되고 어선도 되는데 여객선·화물선만은 안 된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81만 명 우리 섬 주민들에게 설 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것이 81만 명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을 깔아 주는 겁니다.

총리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어서……

총리님, 지금 가짜뉴스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는 여야가 한 몸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야당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것은 이리이리 해서 이렇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4월 원유 위기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현재 원유 비축량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추가로 공급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특사로 여러 군데 가시면서 원유 확보하는데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원유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현재 공식적으로는 1억 9000만……

○**김대식 위원** 아니아니요,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한 200만 배럴 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우리가 하루에?

○**김대식 위원** 예.

그런데 200만 배럴에서 30% 정도가 내국에서 하고 70%가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위기 상황이니까 막은 거지요. 그러면 70%의 수출하는 업체의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70%의 수출하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200만 배럴 가져와서 정제를 하면 30%는 우리가 쓰고 70%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지금 다 막아 놔잖아요. 그러면 70%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작년보다, 작년에는 100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못 나가게 했으니까요 작년 정도의 수출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국내에……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몇천만, 몇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제와 울산과 또 하나, 우리가 세 군데에 비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알람을 해 줘야 쓸데없는, 가짜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에서 좀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소상히 알리고 더 국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존경하는 서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예결위원장이 저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국정 기조에 대해서도 가장 밝으시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 아주 밝은 기획예산처장관님이 새롭게 취임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감사합니다.

○서왕진 위원 추경의 시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또 아주 절박한 곳에 빠르게 결정돼서 집행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또 기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10조 1000억 정도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서왕진 위원 사실상 기름값 오른 부분을 낮춰 주거나 또 직접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덜 쓰거나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구조적 대응 예산 부분은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상황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전체 구성 부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전부 합쳐서 약 4682억 원 수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용자 보급에 2829억 원, 무공해차 900억 그다음에 AI 기반 분산전력망 58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 10조 1000억인데 비해서 에너지 의존 구조, 특히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바꾸는 데는 468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전자가 후자의 22배일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세계정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이번에 또 예기치 않았던 중동전쟁이 발생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참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쟁과 같은 국제질서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고유가 위기와 같은 자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런 방식의 대중적 처방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위기를 잘 견뎌 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당장 지금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국민 부담으로 다

전가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나프타 문제처럼 생필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 충격이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적시 처방,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닥쳐올 수 있는 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담고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 응급처치만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병으로 또 쓰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우리 정부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스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EU와 우리나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분석한 것에 따르면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2019년 이후 풍력과 태양광 확대를 통해서 화석연료 수입을 대폭 줄입니다. 가장 러시아 가스 등에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에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지 않았다면 590억 유로의 추가 화석연료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엠버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실제로 EU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스 발전량을 무려 25%를 줄입니다. 그게 569TW에서 430TW로 줄였는데 이게 수입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590억 유로 정도가 절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에서 10.6%로 겨우 3%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LNG 발전 비중은 28~29% 정도 수준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EU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스 수입을 줄임으로써 화석연료 비용도 줄이고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기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반면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전혀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급하게 쓰는 거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기조에서도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는 수요 관리 대책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예산 비중을 훨씬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 자체가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그널이 되지 않습니다.

싫지만, 누구도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그 비용 부분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다 보완해 주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오히려 그 시그널 자체를 약화시키고 거기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국민적 인식이나 의지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

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재생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 비중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서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의 필요성 또 중심적인 설계 방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싶고요. 화석연료 또는 중동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의 시급성, 우리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계기고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신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대비 올해 본예산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려 났는데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10.1조를 빼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것들 한 9.7·8조 빼고 이라고 나면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5.3조 정도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한 사천육백얼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일부러 계산했더니 그래도 전체 중의 한 9%가량은 저희가 반영을 시킨 거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매우 부족하지요. 그리고 특히나 구조적인 전환을 촉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거지만 대통령께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직접 기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신속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이번 추경 자체가 워낙 촉박하게 준비되고 또 돈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위기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 또 그런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은 충분히 좀 더 강조하고 뚜렷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전환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께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잠잘 때 걱정이 좀 됩니다.

○**서왕진 위원** 정부 이번 추경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아까 2205억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624억 원이었고 ESS 설치 지원 분야가 한 588억 원 정도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포함해서 정부 스스로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지원이라고 설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제주·호남 지역에.

○**서왕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자 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책정이 됐는데, 용자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 사실은 호남 등에 수요가 많을 텐데 정작 접속 가능한 지역에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통이 포화된 호남권 또 영남권은

오히려 이 예산의 혜택에서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해당 지역은 ESS 연계형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일은 아마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셨다면 참 다행인데요. 어쨌든 최근 4년간 호남의 용자 지원 건수로 보면 계통 포화 문제 때문에 용자 지원 건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 지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 지역에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ES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발전소가 전국에 한 2만 3000건 정도가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64%, 1만 4828건이 호남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수용 용량 포화로 2031년까지 사실은 추가 접속이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게 배전단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혁신들이나 ESS를 연계하면 현재의 배전단이나 송전단을 더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더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근본적으로는 늘리되 현재의 조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소규모 단위로, 마을 단위로 추가로 접속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접속 대기 중인 발전소의 한 64%가 호남권이라고 한다면 영남권도 한 23% 정도일 정도로 영남과 호남에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 계통포화 문제가 꼭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신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발전 시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계통망 건설은 한 5~15년 정도가 걸리는 이런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시간의 차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간극을 메꾸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노력들은 그것대로 가야 되지만 현재 괴리돼 있는 상황 자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통령께서도 왜 속도가 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빨리빨리 풀어 줘야지만 중장기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효과들을,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ESS 확충을 통해서 계통포화지역의 수용 용량을 좀 높여 주고 또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원활하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네덜란드 송전망 운영사 테넷 사례들을 보면, 많이 알려졌습니까마는 유연접속 계약방식을 도입해서 추가 송전선 없이 약 9GW의 계통 용량을 확보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방향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좀 집중해서 예산 투자를 하고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ESS 구축 지원 예산이 아까 588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배정됐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더 강화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외에도 비중양급전발전 방식으로 ESS를 각각 500MW씩 두 차례에 발주를 했는데요. 예산으로도 더 확보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또 과거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ESS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력체계 속에서 이 분야가 포텐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단가도 훨씬 떨어뜨릴 수 있고 이 분야 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서도 588억 원 책정돼 있는 이 ESS 부분을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한 2배 정도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마음 같아서는 10배로도 늘리고 싶은데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나프타 문제 또 플라스틱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고 아주 시급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부가 선도적인 정책 노력을 하되 기후환경부 외에 기획예산처라든지 또 산업부 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구조적 전환 부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동구남구갑 출신의 정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 115명이 희생된 비극이자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나 유해 수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책무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수심 약 50m 지점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색에 대한 시도가 진척이 없습니다.

총리님, 저는 작년 예결위 결산심사와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에 미얀마 정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조사단 파견 재개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미얀마 선거 등 정세로 인해서 파견이 지연되고 있으나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큰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미얀마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면서 수색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포괄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마 구체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미안마 정부가 지금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접촉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L 858기 유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 동체 수색과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중동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20대, 30대 굉장히 젊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정말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위원님의 마음과 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하셨던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잊지 않고 저희들이 쫓 쟁겨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밖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도 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도 또 계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총리님께서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늦춰졌던 KAL 858기 추정 동체 수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몬순기후로 5월 이후부터는 정말로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수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가족의 흔적을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정진욱 위원** 능력과 인품이 탁월하시고 또 최책임자이신 분이 기획예산처장관을 맡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기대가 큼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재명 주권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2027년부터 4년간 연간 최대 5조 원의 파격적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되는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5조 원의 인센티브가 사실상 지원되는 시기는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7년 이후에

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당장 현재 진행되는 통합 준비 비용으로는 그 5조 원이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재 광주·전남의 가용 예비비 잔액이 14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은 거의 600억 원 가깝습니다. 자체 추경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9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통합 비용을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장관님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광주·전남 관계자들로부터도 여러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주도성장의 상징적 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통합 준비비용 576억 5000만 원을 이번 정부 제1회 추경에 전액 국비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초기 비용 지원은 당연히 필요할 테고 또 지금 광주·전남의 지방재정의 여력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지방채 인수 방식, 소위 공자기금에서 초장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10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초과세수로 인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광주·전남 지역에도 상당액이 내려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이 행정통합에도 쓸 수 있게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욱 위원 물론 말씀처럼 지방채 인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 내역들을 보겠습니다, 576억에 대해서.

행안부 데이터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 7월 1일부터 출범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행정서류마저도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공시설 표지 체계 정비도 그렇고요. 3개 청사 재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인·공부 일원화, 도로표지판, 이런 어떤 필수행정 인프라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말씀하신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재정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재정 지원의 기본 방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통합특별시에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재정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가 재정지원금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정진욱 위원 따라서 재원 지원 방식이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을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교부세 방식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광역통합교부세를 신설해서 보편적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미 정부안에 재정 지원을 위한 TF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논의를 마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국고 지원이라든가 또는 지방으로 재원 이전하는 것, 포괄 보조를 확대하는 것 등등이 담길 거고요.

특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광역계정을 저희가 별도로 신설하지 않습니까?

○정진욱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정진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특별법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전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20조 원의 재정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금 정부 재정 지원 TF가 한참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국민들께도, 전남·광주, 광주·전남 시민들께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진욱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농업과 에너지 생산이 병행 가능한 영농형태양광이 에너지 안보 확보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영농형태양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마을 단위의 기본소득을 만들어 내는 또는 햇빛연금을 만들어 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로 한 마을이 함께 잘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영농형태양광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농형태양광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에 새로운 소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때 농민에게 돌아오는 소득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아기자기하고 좋지만 사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으로 본다면 그것이 아니고 마을을 넘어서서 군 단위, 또는 군 단위도 몇 개의 군이 함께하는, 대규모로 몇 GW 이상의 규모를 확보할 때……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면 설치비 원가가 거의 한 4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설치 비용,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기준 선로라든가 이런 거 놓는 비용도 규모가 커지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문제 반드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56%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 정책에 거의 제동이 걸리다시피 한 게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재생에너지 만들어 내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또는 성장의 핵심적 요소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사업을 구성하실 때 관심을 크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의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한 질의를 조금 드리고 나중에 정책질의를 총리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드릴 게, 일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분위기가 곧 끝날 것 같은데…… 물론 4주 뒤에 종전이 될지 6개월을 가지는 누구도 모르는 미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보니까 조만간 다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추경을 짜 가지고는 몇 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여전히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설령 오늘 당장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이미 공급망이 다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후과는 3개월, 6개월 간다고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중에 제가 몇 가지 실효성이나 시급성에서 약간 궁금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요. 보시면 채납관리단 9500명 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제위기가 오거나 수해가 있었다거나 혹은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면 맨 먼저 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세금 납부 유예, 과태료 유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서민이나 과태료도 못 내는 국민들 혹은 세금 밀려 있는 사람들한테 이 위기 끝날 때까지 몇 달간 유예해 줄게 이게 보통 많이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생각해?

그런데 이번에는 채납관리단을 아예 대대적으로 해서 과태료 안 낸 사람까지 포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왜 필요할까, 지금? 다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국민 고통을 덜어 주겠다고 하는 추경인데 그분들

에게 지금 심리적 압박이 되는 얘기잖아요. 세금이나 과태료 안 낸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

그래서 국세청장님, 첫째 궁금한 거는 기존의 사업이 있지요. 그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가요?

○국세청장 임광현 이게 3월 5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제 4주 차가 됐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육 위주로 했었고 2주 차, 3주 차, 4주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예산은 100% 집행이 언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이게 9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하면 다 100% 집행이 될 겁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새로 되는 저 금액도 지금 공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네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세금 납부 유예라든가 과태료를 몇 달 유예해 주는 게 맞지 안 낸 거를 이렇게 철저히 찾아내겠다고 하는 게 국민 정서에서 어떻게 보일까……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투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기웅 위원 제 얘기는 굳이 이것을……

○국세청장 임광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는데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

○김기웅 위원 알겠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년 예산에 하든지. 아니, 저걸 굳이 하면서, 지금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저 세금을 끝까지 받겠다는 얘기를 왜 경고성으로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이번에 임시 500명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니,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고용창출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굳이 체납관리단으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저 예산으로.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볼 때는 체납을 하면서, 일자리도 주고 그다음에 또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면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체납자 당연히 받아야지요. 악질 체납자, 그렇지요? 과태료 안 내는 사람도 받아야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김기웅 위원 그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원유가 상승에 따라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세금과

과태료를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저 메시지가 필요하냐, 정무적으로 저게 맞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국세청장 임광현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는 취약계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취업이 안 되는 쉬었음 청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이고요.

○김기웅 위원 아니, 과태료 못 낸 사람들도 취약계층이잖아요. 과태료 못 낸 분들도 취약계층……

○국세청장 임광현 그다음에 위원님……

○김기웅 위원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세금, 과태료 안 내지 않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김기웅 위원 그 못 내는, 체납하시고 있는, 과태료 10만 원 못 내는 분들이 잘사는 분들 아니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운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 중에는 정말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현장에 가서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제 얘기는 그 메시지를, 저것을 주는 이유가 뭐냐.

고용창출 좋은데 지금 체납, 과태료하고 세금 안 낸 것을 끝까지 받겠다는, 지금 원유가 올라가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세금, 과태료 안 낸 건 다 잡아낼 거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실태를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생계곤란형이면……

○김기웅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

○국세청장 임광현 복지정책하고 연계도 시켜 주고……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지금 해야 되는 이유.

○국세청장 임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번에 우리가 500명 뽑는데……

○김기웅 위원 같은 얘기 계속하시네.

○국세청장 임광현 17 대 1의 경쟁률이 왔거든요.

○김기웅 위원 자, 10월에 하면 안 돼요?

○국세청장 임광현 이분들이 정말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알겠는데, 10월에 하시면 안 되냐고.

○국세청장 임광현 예?

○김기웅 위원 10월에 하시면 안 되냐고, 내년 1월에 하시면 안 되냐고. 왜 지금 해야 되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시급성.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유예를 해 줘야지 받으러 다니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고 하셔야지 국세청장님이 ‘내가 세금 받으러 다닐 겁니다’ 하시면 어떡하냐고.

○**국세청장 임광현** 아니, 그래서 투트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기웅 위원** 아니, 청장님, 정무적으로 보세요. 국민들이 저걸 받아들일 때 ‘그래,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거구나’라고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돈 밀린 거 다 받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지.

○**국세청장 임광현**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한 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의 실상을 알리고 복지정책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얘기해 봐야 그 얘기 계속할 것 같고.

하여간 말씀드리면,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고용창출 9500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세금, 과태료 꼭 받으려 다니겠다고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겠냐 저는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국세청장 임광현**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투트랙으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하시니까 됐고.

두 번째인데 저거는 중기부장관님, 보니까 아예 예산이 없던 것을, 신청 안 했던 것을—저도 소위에 들어갔었는데—없던 것을 새로 전용해서 지금 많이 쓰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비창업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예비창업자들을……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 사업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저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같은 사업인데요 방식의 이름을 바꾸고 브랜딩을 모두의 창업이라고……

○**김기웅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신청할 때, 올해 할 때 저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가 계획하면서, 작년에도 예비창업패키지 할 때 오디션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브랜딩을 하고……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올해 예산 넣을 때는 반영 안 했다가 갑자기 사업을 저렇게 하고 계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방식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이 선정 방식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반응이 좋아서 더 예산을 늘려 하시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두 가지의 문제를 나눠서요 예전에는 저희가 하던 것들이 700명을 뽑고 있었는데 그거를 300명으로 바꾸고 제도를 좀 변경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 질문하기는 어렵고.

농림부장관님 계시면……

지금 농지이용관리지원 저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률이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당연합니다. 지금은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조사를 하려면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구별이 될 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 하반기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서 저건 집행률은 없지만 어쨌든 5000명을 또…… 저것도 고용창출 차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기웅 위원 하여간 전부 고용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창출 하시겠다는 저 5000명이 언제 채용이 완료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저희가 5월부터 AI나 드론, 항공사진 가지고 하니까요……

○김기웅 위원 하여간 결론, 그러니까 언제쯤 완료되실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언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월부터 시작합니다.

○김기웅 위원 9월이면 지금부터 다섯 달 뒤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지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김기웅 위원 아니, 아는데 저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9월 달, 다섯 달 뒤에 고용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위원님.

○김기웅 위원 아니, 알겠는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고용창출 효과가…… 9월 때야 채용할 수 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월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그 전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빨리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안 해도. 얼마나 일자리 나눠 줄 게 많은데요. 그렇게 나눠 주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5개월씩 걸리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전처럼 무슨 체납관리단 해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느냐, 더 쉽게 빨리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렸고요. 추경 관련해서 이만큼만 질문드리고.

다음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중동전쟁을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안보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나요? 국제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쪽 보시면 45년에 2차대전 종결, 광 독트린, 쪽 설명을 했지요.

저희가 지정학적으로 이런 큰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군사적 이해가 매우 날카롭게 대립

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가져오고 수출을 해야 되는 대외의존도가 엄청 높은 나라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국제정세의 변화를 빨리 읽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예전에 병자호란·임진왜란 할 것 없이 최근 식민지 전략까지 정말 어이없는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걸 한번 보시면 냉전, 타이트 바이폴라(Tight Bi-polar)라고 하는 2차대전 이후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지요. 73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9년에 괌 독트린이 생기면서 아시아에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고 5년 뒤에 베트남 통일이 됐지요. 데탕트라고 하는 시대가 왔고요. 그때 우리 외교정책이라는 선언을, 6·23 선언을 하면서 평화 공존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고 공산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지요. 결국 어떻게 보면 73년 6·23 선언 내고 2년 뒤에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이 됐지만 그 서문에 보면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을 보시면 데탕트라는 게 미중 팽풍외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보시면 85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 결국은 유럽에서 소련군이 빠지고요 소련연방이 해체되는 길로 가는 거지요. 독일이 그 와중에 5년 뒤에 통일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88년에 7·7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지요. 독트린입니다. 이게 북방정책이라고 알고 계신 거고 중국·러시아하고 수교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2008년 이후에 미국 중심 세계질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는 규범, 윤리, 도덕 필요 없고 힘센 놈이 최고다 이런 식의 세계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총리님께, 7·7 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거기서의 유효라는 것은 국제정세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먹히는가 하는 것과는 별도로……

○김기웅 위원 아니, 우리 정부에 있어 아직도 이 원칙이 견지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하는 것과는 별도로 역대 정부에서 천명했던 입장들은 7·4 공동성명 이후에 6·23, 7·7의 기초들은 현재까지는 다 수용되고 이어지고 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6·23 선언하고 7·7 선언은 다른 패러다임이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건데 7·7 선언의 그 패러다임이 여전히 우리 정부에서 유효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폐기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해서 국제질서가 저렇게 바뀌었으면 혹시 전문가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다가올 미래 세계질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본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대통령께서 독트린을 발표하실 건지 이런 걸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신 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김기웅 위원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7·7 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각국도생이라고 표현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국 중심의 동맹 질서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는 상황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외교·안보 정책의 내용들을 더 깊이 현실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은 있나.....

○**김기웅 위원** 아니, 지금 너무 작은 정책들을 하시니까.....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6·23, 7·7 등등의 패러다임을, 현재 역대 정부의 패러다임을 폐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뭔가 조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저게 폐기하고 살리고 죽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기본 원칙과 입장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무슨 실용주의적, 국익 중심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과연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다음 맺어질 질서가 뭔지도 예상해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기본 입장으로 가져가야 할 그대로 정말 성공적인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은 7·7, 6·23 폐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주신 그 말씀은 지난 대선 시기부터 포함해서 일괄되게 쪽 정리를 하고 있고요.

○**김기웅 위원** 하고 계시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그것을 굳이 어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까지 방향을 잡았는지.

○**국무총리 김민석**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미 우리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또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태도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웅 위원** 정책이 아니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 어떤 정책, 6·23 또는 7·7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종의 패러다임 또는 일종의 외교 프레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큰 틀의 것을 계속 논의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그러면 과거 것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현재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현재는 이미 그러한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난 대선 시기부터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발표할 계획은 없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7·7 선언 나온 지가 40년이 됐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프레임 또는 이런 것을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의 복잡다단한 정세를 대처하는 데 크게 유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런 적절한 틀이 있으면 제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의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하여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필요성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자세히 좀 여쭙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진성준** 김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농식품부장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앉아서 들으셔도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 5000명 채용해서 농지조사 하는 것은 저희가 5월 8일까지 조사원 채용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고용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저녁식사를 위해서 오후 회의는 허성무 위원님 그리고 임종득 위원님 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어제 회의에서 오늘 회의도 내내 회의장을 지켜 주고 계시는데 식사 이후로 미뤄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산자부장관님 대신에 통상교섭본부장님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 스마트팩토리를 20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것이 기초 단계에서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AI까지 해서 아주 최상급으로 스마트팩토리가 진행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다크팩토리 실현돼 있고 미국도 일부 그런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다크팩토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스마트팩토리를 AI까지 융합한 최상의 공장들은 다크팩토리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할 때는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 흔히 이야기하는 KPI나 ROI가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기업들의 걱정이지요.

그래서 저렇게 기업들을 모아서 회의를 3월 18일 날 산단공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저기 나오는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견·중소기업도 그렇고 한결같이 데모공장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쓸 수 있는 실증 데모공장을 먼저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기 파랗게 색칠한 부분이 다 공통된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데모공장을 빨리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를 과감하게 보급할 때 산업단지에도가 그때도 데모공장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전국 산단에, 필요한 곳에 다크팩토리도 보급하려면 데모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것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27년 예산에 반영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야만 저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동전쟁도 전쟁이지만 제조업 경쟁 전쟁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경쟁이고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산자부에서도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님,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지요? 어제 산자부 내부 소위에서는 여야,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실 각 부처로부터 받았을 때 산업부가 요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핵심은 아까 추경 편성의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구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체성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

○**허성무 위원** 장관님, 구체성과 기술은 다 있습니다. 다크팩토리 이전에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AI 융합된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을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몇 군데를 가 보셨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안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구체적인 현장을 많이 가 보시면 절박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데모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데모팩토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산업부에서 보다 면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제안하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산자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십시오. 방산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 죄송합니다. 중동 전쟁이 있고 그 이전에 러우전쟁도 있고 한테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입국, 수요국이지요. 수요국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고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것은 우리가 폴란드에 팔았던 공격형 미사일이지요. 천무라는 건데요. 밑에 싼고 있는 트럭, 저것을 탑재하고 있는 트럭 있지요? 저 트럭은 우리 국산품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는 한화에서 만든 트럭을 쓰는데 한화가 트럭 전문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

에 저 트럭의 기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자체 트럭에 우리 무기를 얹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이유는 한화가 만든 우리 트럭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쓰고 나면 회피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것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저것 수출하려면 저 밑에 체계도 만들어 줘야 되고 체계 통합도 해 줘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또 보여 주세요.

저 뒤에 보이는 포대는 천궁입니다. 저것은 방어 무기지요. 요새 천궁-II가 UAE에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서 난리인데 저것도 역시 밑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려는 다른 나라도 저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서, 예를 들면 체코 것을 쓰자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저 자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공격도 할 수 있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히 저가 드론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가는 나라들이 그 방어 능력을 빨리 해서 수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 체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저에게 온 답변은 ‘정말 공감한다. 빨리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27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자’ 이런 겁니다. 수요국에서는, 수입을 하겠다는 데서는 지금 당장 체계 개발을 해내서 통합해서 해 달라는데 27년에 예산 태워서 하겠다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내년까지 가려면 9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 그다음에 협력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동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된다면 정말로 이 수요 대응형으로, 특히 수출용이거든요. 수출용은 지금 국내 소요가 없으면 R&D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수출용으로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 기재부장관님도 계신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서 실시간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필요성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추경 요건에 부합한지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허성무 위원 부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협력업체가 한 100개 정도 광주하고 창원에 있는데 광주·창원에 100개가 넘는 중소 협력업체와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들, 가족들, 그것 다 민생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 추경이라 하지만 또 동시에 민생 추경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본적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저희가 추경의 근간에 깔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우리 속담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원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같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산자부도 이와 관련된 조직이 올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부처의 의지도 있고 기술도 있고 사업 준비도 다 돼 있는 겁니다. 빠르게 시급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방금 또 이번의 예산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수출용 방산, 우리는 지금 대개 국내의 우리 군의 소요 체계가

요구될 때만 R&D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용은 국내 수요하고 관계없이 요구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문 기금을 또 하나 만드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또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것 그냥 넘기시고요. 저것은 다양한 요구에 대한 것이고.

지금 방사청의 R&D는 우리 군 소요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없는 R&D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산업부 R&D는 개별 예산으로 매번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늦어지고 하면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 좀 개선을 해 보고자 저희들이, 그다음 것 하나 넘겨 주세요. 수출형 방산 R&D 기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1차관님 유심히 보고 계신데요, 좀 잘 봐 주시고. 이런 지원 대상, 재투자 구조, 민간 참여,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이게 하나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최근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위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률 제정이고 부가되는 법까지 몇 가지를 다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형 방산 R&D 기금은 법령 개정 최소화할 수 있고 즉시 착수할 수 있고요.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산에만, 특히 수출용 방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차관님은 착 보시면 바로 느낌이 탁 오실 텐데 한번 깊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산에 대한 환경이 무지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국내 소요에서 수출로 넘어갔는데 수출도 전쟁이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시간 소요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입해 가는 곳의 니즈에 맞게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찌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R&D는 우리가 직접 다 다루지를 않고 과기부에 있는 혁신본부가 5월 말까지 받아서 그래서 쪽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나중에 저희하고 좀 협의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허성무 위원** 맞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그런 시점, 과정, 절차, 규정 이런 것에 있어서 바로 반영키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금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기금을 오히려 지금은 통폐합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 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방산 R&D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 특화를 위해서 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시간이 짧아서 정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목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중기부장관님, 이번 추경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잘 준비가 돼 가시는 것 같아요.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합계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5.5조 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이 돼 있어서 참 잘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융자 3200억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역신보 채보증을 위해서 26년 예산에 1681억 2800만 원 이미 반영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추경이 한 700억 정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서 700억을 태우면 채보증 쪽에서 700억 자기자금을 또 하고 이러면 1400억 정도 되면 운용배수까지 해서 한 1조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4만 3750곳의 소상공인들에게 약 3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을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게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자꾸 웃지만 마시고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 법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하고……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8182억을 추경에 대폭 보장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에 1680억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예년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성무 위원 올 예산에 채보증을 위해서 1681억 이거 할 때는 이런 전쟁 상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돈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파이를 이 정도 키워 주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지역구가 있으시고 지역구에서 소상공인들 수도 없이 만나겠지만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전통시장 한 발짝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정말 절박하게 챙겨 줘야만 정부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걸 지원을 해 왔는데 저는 지역신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좀 엄밀한, 더 엄격히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자구적으로 자체 수입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어떤 보장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성무 위원 맞습니다. 방금 장관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제1금융권에서 부담하고 있는 출연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쪽은 0.07%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6월부터는 0.0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용보증기금 요율은 0.225%고 기술보증기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135%입니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지역신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신보중앙회에다가 재보증 관련해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지역신보는 또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성무 위원** 광역자치단체도 내고 기초자치단체도 출연을 해서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광역이나 기초에서 내는 출연 그것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때도 해 보니까 이것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코로나 때 그것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했고, 지역의 신보에서 이사장님들이 자치단체마다 찾아가면서 더 추가적인 출연 요구를 끊임없이 부탁하지요. 그리고 역시 지자체도 예산이 어렵지만 추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위기가 닥치면 당장 불감당의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허성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주·영양·봉화의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먼저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란 전쟁 2주간 휴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전망을 간단하게 어떻게 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보지 마시고…… 보셨네요.

(웃음소리)

CSIS에서 이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국을 지목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들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유나 헬륨, 나프타가 좀 심각하고, 사실은 이거보다도 지금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난맥상들이 하나의 큰 어려움이고 또 위기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총리께서 미국에 가서서 트럼프 대통령 깜짝 20분 간 만난 거. 그 이후에 면담 사실과 관련해서 김정은 관련된 관심을 표현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국방부장관, 전쟁부장관이지요?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같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 앞에 아마 NSC로 추정되는 회의가 막 끝나는 상황이었어서……

○임종득 위원 같이 대화할 시간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때 제가 들어가고 그분들이 나가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분들이 잠깐 서 계시고 저하고 악수를 나누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걸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 3월 16일 자 조선일보 내용에 배석을 했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던 거고……

○국무총리 김민석 그분들을, 배석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회의가 끝나고 제가 들어와서 저런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약간 그렇게 잠깐 서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핫이슈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인자인 총리가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의 논의가 있으리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니까, 사실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제가 이미 밝혔지만 그때 원래 예정되지 않은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서 대화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

○임종득 위원 그러면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에는 다른……

○국무총리 김민석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임종득 위원 없었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종득 위원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바로 그다음 날 그냥 SNS도 하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도 어찌 보면……

○임종득 위원 최소한 먼저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전쟁과 관련된 일종의 비밀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관심을 보인 사안 자체가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사실 아직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쪽 나온 것 자체가 파병 요청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한 정부의 각료인데 그것도 NSC 멤버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것을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아마 관련한……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장관의 입장 차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미국 측의 입장하고 우리하고 상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갈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 상황 관련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게……

○임종득 위원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이야기가 저기 다 나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여러 가지 입장을 교차적으로 표현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이 그곳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김민석 도움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지금 나토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시점에 미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표현한,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임종득 위원 그렇겠지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거의 전 세계를 향한 언명 아니었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입장들을 좀 보면 전인범 장군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필요할 때 동맹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밑에 보면 ‘그냥 NO라고 말할 위치에 우리 한국이 있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동맹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멘트 외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종득 위원 지금 한국이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나 미국의 각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가 한미관계가 끈끈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 저런 파열음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나토의 회원국들과도 저런 다양한 언명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의 의회에서 그런 방식의 질문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보고…… 다음.

전략 이동이 이번에 이란전 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사실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안규백 장관이 청문회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6년 10월 13일 발언에 보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돼 가지고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께서도 그걸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총리님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인정·불인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사드나 패트리어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전황이 진전되는 가운데 우리 과전해서 일을 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들이 자료를 보냈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이 관외로 나갈 때는 한미 간에 협의한다라고 아까 국방부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없었다고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 발표를 한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파생상품에 대해서 25%, 의약품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100%인데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5%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크지요.

○임종득 위원 크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안보와 관련된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태가 기존에 우리 또 합의를 이루거나 좀 좋은 관계로 가던 한미원자력협정이라든가 원자력잠수함 그다음에 마스가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한 바로……

○**임종득 위원**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이 727.9조 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753조 원입니다. 재정지출이 상당히 확대되는 거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나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가부채 비율도 일정하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관리되거나 그 부분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여기 밑에 보면 2024년 4월 달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환율 1400 돌파했을 때 ‘국가 경제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 위에 보시면 환율이 지금 15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 경제위기가 가속화됐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경제가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라는 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한국 경제라는 코끼리는 그 이전 정부가 최악으로 만들었던 상황으로부터 높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정부는 이번 추경을 중동발 전쟁 리스크와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세부 내용을 들어 보면 거기에 관계없는 정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저러한 정책들이 정말 중동 전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실지로 에너지라든가 물가,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가용한 예산을 추경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타격을 받는 대상들에 대한 지원들도 바로 저런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얼마가 지금 반영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정부안 당초 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금 증액……

○**임종득 위원** 바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종득 위원** 최초에 2658억 원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 금액 중에 정말 긴급성과 한시성이 요구되는 내용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지원이 78억 원, 이것도 등유만 들어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런데 실지로 농기계가 제일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넣었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기계는 경유와 휘발유를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 임종득 위원 그걸 왜 안 넣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의견 주셔서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무기질비료 가격 관련해서 42억 원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봤는데 심의 과정에서 많이 깎였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56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것밖에 안 되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번에 42억을 쥔끔 이렇게 넣었어요. 이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기질비료 단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 임종득 위원 지금 요소라든가 암모니아 가격 급등하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잠가 놓을 수 있느냐고요. 농민들은 죽겠는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전기요금 문제 그다음에 비닐자재 관련되는 것 이것은 아예 반영도 안 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아도 멀칭비닐이랑 하우스비닐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종득 위원 꼭 필요한 것은 다 안 한 상태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관 DB 구축이라든가 소비할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걸 돌려야지요. 도와 달라 그러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실지 피드백이 왔다면 그 예산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지금 반영된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요, 위원님.
- 임종득 위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는 지금의 전시 추경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꼭 맞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

니다.

다음은 국세청장님, 아까 김기웅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안을 보면서 체납관리단 대폭 확대 이걸 도대체가 지금 생똥맞은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 놓은 것 한 다섯 가지 보이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임종득 위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단기 일자리로 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하고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 전문 영역에 대해서 비전문가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기존의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징세와 관련된 조직과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만들면 기능 중복의 문제라든가 지휘 혼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추정 취지에 당연히 안 맞지요.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인원을 1만 명이나 늘려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걸 정무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상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 체납 실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도 문제가 있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께서 체납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임종득 위원 체납 징수의 실효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비전문가가 확대된다고 해서 징수율이 올라갈까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안 올라가겠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체납자가 133만 명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게 필요하냐고요. 그걸 해 가지고 더 많이 건졌다는 거예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임종득 위원 그것 자체가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그게 아니고요. 체납자가 133만 명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이것에 대해서는 국감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을 하셨는데……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지금 비전문가들이 이걸 접근해 들어가

기 시작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런 것에 대한 법적 검토 다 거치고 한 겁니다.

○임종득 위원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왜 이 시기에 그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실태 확인입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광현 청장, 위원님 질문을 다 들으시고 제가 답변 기회를 조금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세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임종득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무조건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요번에 검토를 좀 하십시오.

남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체납관리단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장께서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으니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체납자가 한 133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체납이 되고서 일이 년 정도에 정리가 안 되면 정리보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 관리를 약간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은 현장에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왕도거든요. 거기에는 전문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임종득 위원 그게 왜 지금 해야 되느냐고, 추경에 반영돼야 되냐는 문제를 제가 묻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는.....

○임종득 위원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진성준 조금 들어 주세요.

○임종득 위원 알았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실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면 복지 연계하거나 납부의무 소멸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이고 그런데 사는 형편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추적단에 연락을 해서 그다음 단계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그리고.....

○위원장 진성준 많이 아쉽습니까? 30초 드릴게 마저 하세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체납 징수 업무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복지 연계나 납부의무 소멸 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어서 여기에서 받는 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 때와 같이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본관 1층에 있는 제2식당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저녁 식사 하실 곳이 없으시면 가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께서 입장하셔서 마침내 의사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경기 과주갑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 상황이 발생한 지 오늘이 40일입니다. 40일이라면 6주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원유 그리고 나프타의 수급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 품목에 재고가 부족하고 고유가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전쟁 추경을 편성하였고 오늘 예결위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홀짝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무총리님, 그런데 오늘은 좀 나쁘지 않은 날이지요? 오늘은 트럼프와 이란 측에서 SNS에 올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이것 트럼프 얘기예요—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이에 대해서 이란에서는 외교부장관이 최고안전보장회의의 대표를 대신해서 성명을 냈어요. 역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

에 대해서 방어 작전의 임무는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싸웠던 것이 일체 중지되고 휴전 협의에 이른 거라고 보는데 총리님, 이게 실제 휴전 협의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휴전 합의라기보다는 문면 그대로 본다면 잠정적 공격 중단이기 때문에 휴전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협상의 시작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윤후덕 위원 글썄요, 이게 합의 문서가 있다라든지 또 외교적으로 공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SNS에 올리는 것 가지고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 없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 그 발표 이후에 상호 간에 싸움질을 한 것은 없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이후로는 그렇다고 못 듣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공군이 작전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지요, 지금 시점까지?

○국무총리 김민석 예, 현재까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오늘 계속 여기 대정부질의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 회의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아침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열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가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조금 전에 뉴스 나오는 걸 체크하니까 그리스와 어디하고 해서 2척이 8시간 후에 통과했다라는 것이 기사는 나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란 외교부장관의 성명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은 이란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가능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단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님이 수보회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진의, 이란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라 그렇게 좀 하셔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파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외교 당국에서 지금 파악 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총리님은 이런 것을 잘 모르겠……

○국무총리 김민석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장관하고도 한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해수부장관님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윤후덕 위원 해수부장관님, 전쟁의 현장에서 선사, 우리 배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사들의 동향이나 이런 얘기는 어떻게,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오늘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척에 대한 17개 선사의 담당자들과 다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선사의 입장은 관련국의 구체적인 통항 조치 및 외국 선사의 동향을 고려해서 안전이 보장된다면 신속히 통항하겠다는 입장이었습

니다.

○**윤후덕 위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란 측, 이란의 군,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행에 대해서, 통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선사에 이런 정보를 줘야 선사들도 통항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해서 외교부 쪽에 관련국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것은 휴전을 합의한 거니까 더 발전하고 종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우리 배가 한 26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후덕 위원** 그 26척 중에서 실제 우리 항구에, 대한민국이 도착지인 배는 몇 척이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5척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5척이요? 그 5척이 다 유조선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러니까 그 26척 중에는 5척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5척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윤후덕 위원** 오늘 산자부에서 프레스 가이드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7척이라고 나온 것 때문에……

○**윤후덕 위원** 7척. 그런데 그게 해수부장관이 맞겠지요? 5척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거기에 한국 선원도 있고 외국 선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그게 한 오륙백 명 정도 될 거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지금 우리 배에는, 국적선 26척에는 한국인 173명하고 외국인 451명이 타고 있고요. 외국적선 11척에 한국인 37명이 타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배 11척에 37명의 한국인 선원이 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계속 케어하고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선사 배의 외국 선원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어제 오래간만에, 아마 7개월 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윤후덕 위원 거기에서 여야 간에 추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주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오늘 예결위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꼭 시급하냐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되는, 예를 들어 트럭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짐캐리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은 또 반영이 되었고 그런 정도입니다.

○윤후덕 위원 여야정이 이런 합의를 한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참 좋은 뉴스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 얘기 중에 추경에서 합의된 부분 이런 것은 합의하고 그래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제가 지금 현존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분을 대통령이 발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과찬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될 것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야정에서 증액하는 내용은 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추경이 빚을 내지 않은 추경이다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이 있는데 또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은의 잉여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있고 그런 돈으로 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도 한 3조 4조 5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한은 잉여금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4조가 지난 2월 11일 국고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증액을 한 게 꽤 돼요. 보니까 농림해양수산이 위원회가 워낙 길어 가지고 거기는 무려 9739억을 증액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446억 등등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한 3.5조 정도 돼요.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봐서…… 기획예산처,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국회에서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액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각 상임위나 또 예결위 단계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이번 추경에서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305억 정도를 증액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 꼭 좀 장관님께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게 너무 조금만 보조를 해 줘서 농민들이 아주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16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한 게 여야 간에 합

의를 했어요. 이것도 좀 꼭 반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가 없어서 예비 심사도 안 한 곳이, 제 상임위가 그곳이에요. 외통위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지 심사도 못 했는데 실제 중동지역에서 지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전세기를 올리고 또 수송기를 준비하고 또 여기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이동시키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을 외통위에서는 재외에서 긴급 대피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반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중동지역이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 안전이 안 되는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용을 이번에 한 50억인가 이렇게 좀 더 증액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군, 해경 등의 유류비 문제라든가 외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정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된 게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런 대피와 관련해서, 즉 중동전쟁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혹시 반영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예.

○**윤후덕 위원** 이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법인세가, 요즘 잘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데들이 영업이 좀 많이 좋아져서 기대가 되고 이릅니다.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중간 납부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합쳐서 추가 세수가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법인세수는 완전 집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소급 차원에서 보면 작년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당초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호조입니다.

그런데 호조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3월 법인세는 2025년도 법인들의 실적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법인들의,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종의 성과는 하반기 8월에 법인세수 중간예납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서 8월 하반기 법인세수가 좀 더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윤후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금 중동전쟁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르그 섬을 폭격했다가 또 금방 24시간도 안 돼서 또다시 2주간 잠시 공격을 중단하겠다, 합의가 된 것처럼 지금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페르시아만에 있는 26척의 우리 국적 배를 신속하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총리님,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크게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당국이 그 사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총 선박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총 선박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한 2000여 척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하루에 135척 정도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척이 하루 135척 하면 2주 만에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풀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빠져나오는 데 한 이삼 개월 걸릴 거라는 예측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벌써. 거기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은 이미 거기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 26척이 다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우리 외교 당국, 총리, 청와대 비서실, 총동원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26척 중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26척 중에서 4척은 유조선이고, 한국 오는 한국행이 5척이고 그중에 4척은 유조선, 1척은 자동차 뭐라고 했지요. 4척 유조선이 일단 최우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뭐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들 배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조할 듯 어떻게어떻게 하면서도 사실상 뒤로는 이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했는지, 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리가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하신 일본 선박 1척은, 선박이라는 것이 선사의 국적도 있고 또 실질적인 소유주 이런 등등의 성격이 다양해서……

○박형수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을 딱 그렇게 일의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에서 그렇게 핑계 같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이렇게 노력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왔고, 이런 걸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선박이든, 선적이 어디든 간에 일본은 어쨌든 간에 나온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불안들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교민들이 무사히 다 소개가 됐고……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께 크게 보이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체 경로입니다. 대체 경로와 또 대체 원유 수입국을 확보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대체 경로가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만으로, 호르무즈로 못 나오면 홍해로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지중해를 통해 희망봉으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대체 경로를 통해서 호르무즈를 통하지 않는…… 일본이 우리보다도 더 높습니다,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정도가. 거기는 거의 95%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일본은 4월 달에 대체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을 20%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5월 달에는 그게 60%까지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호르무즈가 아닌 홍해나 지중해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 대체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을 제외하고 교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해당 선박들은 그 상황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이미 아실 거고요.

○박형수 위원 지금 제가 총리님께 물어본 것은 대체 경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이 대체 경로를 통해서 4월 달에 20%를 확보했고 5월 달에는 60%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국무총리 김민석 그 사이에 계속 검토를 했고……

○박형수 위원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대체 수입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뛰어다니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국민들께 발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족하다라면 더 뛰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 김민석 초반에 UAE에서 일부 있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박형수 위원 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가장 급선무가 일단 호르무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유조선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의 능력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위원님 걱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이 매표용이 아니다, 지방선거용이 아니더라고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또 예산당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우리처럼 지금 추경을 편성한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 혹시 추경을 편성한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추경은 아니지만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등의……

○**박형수 위원** 일단 없지요? 보조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일본의 추경 검토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넋케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지금 박홍근 장관님 하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추경은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추경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유류세를 할인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표용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 국민 70%의 국민들한테 피해지원금이라고 나눠 주니까 이게 또 매표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정말로 매표용이 아니라고 하려면 핀셋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핀셋 지원이 안 되고 방만하게 지원을 하고 전쟁과 관련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매표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또는 여당이 정말 이것이 매표용이 아니라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 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 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근 장관님도, 물론 2주 동안 휴전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좋은 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추가로 추경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은 걷어 내고 재원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이 전쟁이 2주 동안 잠시 휴전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또는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석유 생산시설들이 얼마만큼 파괴가 됐는지 그걸 복구하는 데 얼마가 걸릴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을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세수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 썼으니까 국채 발행할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간사님,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인 방파제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이미 피해와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높은 파고일지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파제로서 만약에 우리가 감당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이 있다면 하는 전제하에 제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여파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써 버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원들은 우리가 충분히 초과세수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쓸 것이 아니라 아껴서 쓰고 비축을 해 뒀다가, 그렇다고 그 돈 어디 갑니까? 결국은 국민 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걷어내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넣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남겨 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혹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또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별로 시급하지 않은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끼워 넣기용으로 한 그런 예산들 분명히 있지요? 막 지적하려면 많습시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국세채납단, 오늘 아까 우리 당의 김기웅 위원님과 임종득 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국세채납단을 운영하는 기조와 지금 추경을 하는 기조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고액·상습채납자들에 대해서 이미 국세청 조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미 가동되고 있고, 아까 자꾸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말이 막혀 갖고 국세청장이 말을 못하는 것 같던데 그 투 트랙의 두 번째가 그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일찍 조세채무를 면제해 주고……

○**국세청장 임광현** 예, 복지정책과 연계해 주고……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 부분이 있으면 안내도 해 주고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시다.

○**박형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도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조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일찍 감면을 해 주고 그걸 확정 지어 줘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에, 세금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다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야지요. 그것 놔둬야 되고 또 그 기간에 가만히 두면, 소멸시효가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먼저 없애 주겠다? 그건 노력과 시간과 돈의 낭비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것 내지 못했으면 그것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왜 돈을 들여 갖고 그걸 없애 주려고 합니까? 그 발상부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장관님, 어제인가 말씀하실 때 태양광의 경쟁력이 무너진 것이 윤석열 정부 때 태양광산업을 옥죄어서, 그래서 무너졌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전제 잘못됐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때도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지금과 똑같이 이것 중국 추경이다, 이렇게 태

양광사업을 많이 늘리면 패널이나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특수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렇게 이미 비판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이미 그 당시에 중국산들이 우리를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더 개발해 갖고 중국을 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아마 원전 때문에 태양광이 소홀히 된 부분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느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원전 생태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에너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과 원전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걸 서로 너 잘했네, 나 잘했네 하면서 혈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양광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했으면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정책 방향을 여야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큼니다.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가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도 아까 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국세청장은 아까 많이 하셨더구먼 또 하신다고……

○국세청장 임광현 체납이 되면 체납기록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나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무소득인 경우에는 이거를 면해 주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 취업을 하든. 그래서 이분들이 재기를 해서 소득이 나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국가에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 입장에서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전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신청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신청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걸 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신청을 받아서 실태 확인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형수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경기 의왕·과천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사하고 가야지」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소영 위원 기후에너지부장관님,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후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원래 차량에 대해서만 요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로 인증받았는지, 차량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파는 차량인지도 보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일부만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해서 그 회사가 파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파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지요. 이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실상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소비자들도 그만큼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기후부가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공식 답변은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거라면 말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무 영세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제조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자동차만 팔아먹고 AS도 안 해 주고 도망가 버리면 국내 소비자들 피해가 생기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악성업체, 부실업체를 걸러 내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총점이 100점입니다. 가점·감점 요인이 따로 있긴 한데요, 어쨌든 100점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80점 미만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서 80점을 못 맞으면 그 회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원래 수백만 원 받던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을 볼 때도 과락이 6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업체 걸러 내는 거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높은 기준인 거지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기후부가 부실업체, 불량업체를 걸러 내는 방식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막대기처럼 하위 20% 업체만 골라내서 배제하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놈 빼고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지요. 우리 정부는 이런 규제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부가 이번에 채택한 방식은 왼쪽 막대기인데 상위 20점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80%는 배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왼쪽 막대기에서 소비자는 저 상위 20% 업체 안에서만 앞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요. 저는 너무 과도하고 부당해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추진계획을 바꾸겠다고 해서 저도 포괄적인 보고는 받았습시다만 제가 그 세부평가 항목까지를 다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으시고 또 일부 유튜브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일리 있는 문제 제기시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지금부터 제가 보여 드릴 세부 평가기준을 만약 이게 발표되기 전에 김성환 장관님께서 보셨다면 절대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량평가 항목입니다.

첫 번째,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점 10점. 기업의 신용도가 낮으면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타당한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 대기업이라도 본사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한국지사의 자산과 수익, 매출만 봅니다.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만점을 받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BMW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한국지사의 신용만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몇 점이 깎이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급사업 수행기간, 배점 10점.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만 10점을 받고 3년 미만이면 1점을 받습니다. 신규 업체는 여기서 9점이 깎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80점이 벌써 코앞이지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존 업체만 보호하겠다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투자 현황, 5점. 연구개발 많이 하면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투입한 금액 500억 이상이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사실상 국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특허 보유·출원 현황, 좋은 차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특허를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하는 것은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만 점수를 받습니다. 전 세계 특허가 수천 건이 있어도 국내에서 20건 특허를 채우지 못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술을 특허출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가격이 높아지겠지요. 저는 전기차 보급에는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비망 구축 현황, 5점.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아주 정부의 입맛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국내에 직영 AS센터가 15개 이상 있어야지만 이 점수를 받습니다. 협력업체·협력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영을 더 선호하는지 협력을 더 선호하는지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15개 직영 AS센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정성평가는 더 놀랍습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런 겁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눈에 불합리해 보이는 수십 가지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 드릴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연구개발시설이 있어야지 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소방차·응급차, 공공서비스 차량을 개발하거나 제조했었어야 이 7점 중에 일부의 항목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말고 또 어떤 회사가 소방차를 개발할까요?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10점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최근 3년간 수행한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전기차 제조업체여야지 5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국토부랑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국내 기업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가점 기준인데요. 제조 시의 탄소배출량 평가, 5점.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줄이겠다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만들 때는 막 석탄화력 뽕뽕하게 돌려서 만든다 그러면 취지에 반하니까 이런 업체들은 저는 감점을 줘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정책에 참여해야 5점을 받습니다. 충전기 보급, 마찬가지로 5점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충전기 타입 중에 딱 콤보1 타입만 인정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다른 유형은 10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기후에너지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해서 저는 기후에너지부의 하는 일을 지원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말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평가기준에서 제가 어렵잡아서 계산을 해 봐도, 우리나라 전기차 제조·수입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자동차회사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국내 자동차기업 중 소수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아무리 선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고 동의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니, 우리 전기차 보급한다면서요. 소비자한테는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기차 주차도

못 하게 하는 건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직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십 대의 다양한 차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야, 우리 보조금 받으려면 우리가 정해 주는 차 중에서 사’, 저는 이렇게 해서 전기차 보급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 수요를 줄이게 되고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비용은 높아지게 됩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필요없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를 보급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허들을 두고 국내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 말고는 보조금을 못 받게 만들면서 과연 우리가 320만 대를 2030년까지 더 팔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 국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파는 자동차가 24년 기준으로 연간 278만 대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해외 자동차가 29만 대입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29만 대 수입하면서 그것 10배 팝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164만 대 정도 규모에 불과하지만 북미는 2000만 대, 유럽도 1900만 대, 양쪽 다 각각 우리보다 약 10배가 더 큼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외국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의 보조금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는 외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와 평등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산업 보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제 의정활동 기간의 절반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동차업체도 정말 많이 방문해 봤고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이렇게 과도한 국내 업체 보호가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동차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 주고 국내 업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도 그 비싼 전기차 가격을 국내 업체들 잘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가격경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낮추지 않을 겁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차는 저렴해지지 않고 해외 차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장관님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지지하지만 이 일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보셨다면 이것은 발표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빠르게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정책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망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고 대기오염 줄이고 석유 의존도 낮추려고 하는 전기차 보급정책 예산이 이렇게 특정 기업의 매출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추경안에 있는 전기차 예산도 반영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추경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한** 지금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문제나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세부의 배점까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정책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차원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연차보다 아직 한국의 전기차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를 줄여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 보호와 국내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의 경쟁과 보호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이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는 수준에 맞게 평가의 틀을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혹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배점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검토를 해서 이 차를 판매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소영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께서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시간이 짧아서 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1월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케데헌 열풍을 얘기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된 국내 OTT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OTT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랬더니 총리님께서 오히려 방미통위, 과기부, 문체부를 묶어서 OTT TF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광화문에 나갔더니 한복 입은 외국인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OTT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희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문제를 놓고 그렇지 않아도 미방위원장 등을 포함한 몇 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방위에서 과거에는 주로 규제 관련한 부분으로 업무가 있었는데

데 진흥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를 해석하고 있고 해서 관련해서 미디어발전 위원회를 같이 조만간 구성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관련 기구 간에 약간 더 조율이 필요한 상태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사실 질의드리려는 게 근본적으로 미디어발전 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서 가지고…… 지금 방미통위가 추가로 어떤 과기부에 있는 인력을 붙인다는데 제가 보기에 되게 땀뽕식이거든요. 좀 정교하게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미발위를 빨리 출범시켜 가지고 거기서 콘텐츠 진흥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방미통위와도 상의하고 미발위 구성 문제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총리님께 좀 질의드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주식시장도 아주 잘, 5000을 넘어서 6000까지 갔다가 지금 중동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또다시 5800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런 정부의 개혁 의지를 흔드는 편법과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며칠 전에 삼천당제약 주가가 올해 24만 원대였는데 3월 말에 1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50만 원대로 급락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공시 왜곡, 투자자 신뢰 훼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도 우회하는 꼼수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총에서도 그랬고. 이사 임기 연장, 이사회 정원 상한 축소, 시차임 기제, 감사위원회 정원 확대, 3% 룰 회피를 위한 지분 구조 변경, 자사주의 우호지분화 이런 꼼수가 횡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초반에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사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동 상황이 터져 갖고 좀 어려워졌지만 이렇게 다녀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머니무브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저런 꼼수를 조기에 정부에서 진화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나 방안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후속 상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종합점검을 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즘 보면 신라젠, 헬릭스미스의 공시 문제, LS 에식스솔루션즈의 중복 상장, 여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법 개정하면서 되게 많은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부처가 관계가 있는데 총리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제가 뭐 하나 여쭙볼게요.

교육부에서 교육부 특교가 3년인가 5년 신청 제한이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훈기 위원** 그게 되게 기계적이고 족쇄 같은데 그걸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그게 필요한 데는 특교가 갈 수가 없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일정하게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특교가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진성준** 이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총리님,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26조 이렇게 추경해 주셨는데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을 많이 다녀 보면 적절하기는 적절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시면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어민들은 조업할수록 적자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25t짜리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개 버는 건 줄고 나가는 것만 늘었다, 그리고 화훼농가들을 만나면 난방을 끄면 꽃이 죽고 난방을 켜면 내가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얼른 비용으로, 화면을 보여 주면 어업은 유류비가 최대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월 소득이 103만 원 정도 줄었고요. 화훼농가는 운영비가 한 30% 정도, 월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유가 상승에 따라서 부담이 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원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는 거지요.

어업은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1392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는 468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화물차들은 44만 원 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소득 감소는 훨씬 커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화훼농가 역시 핵심 내용들 반영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비닐,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은 반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원을 해 주는 정부의 추경은 너무나 방향은 좋고 옳지만 체감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 상황이 더 오래 간다면 좀 더 현실화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삼사개월 후에 추가 반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기획예산처에서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늘 그렇듯이 현장의 어떤 핀셋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늘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도 보완해 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도 함께 많이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문제인데요, 특히 해외에서지요.

사진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입니다. 진품과 짝퉁인데요 얼핏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짝퉁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특히 2015년 수출상품, 2025년 수출상품 15개를 비교해 보면 농식품, K-푸드하고 그다음에 K-뷰티, 화장품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에 위조상품이 최고 많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식품·화장품부터 패션도 많이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4년 발간된 OECD ‘불법 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유통 규모가 약 11조 원이고 우리 기업의 매출 감소는 피해가 7조 원, 우리 국내 일자리는 1만 4000개, 정부 세수가 1조 8000억이 줄어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 해외에서 소송해 갖고 피해보상 받은 액수가 너무 미미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1억 넘는 보상이 없는 거고 삼사천만 원 수준에서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피해가 막심해서 지식재산처가 대처를 좀 세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는 기업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나 프랑스처럼 국가 인증 상표를 개발해서 주요 수출국에 등록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게 하려면 문양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개발 비용이 들지요. 그것을 지금 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조 방지 시스템에 탑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90여 개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종의 그런 비용들이 드는 거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리고 그것 홍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비용을 보면 그걸 다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비용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95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국가 인증 상표를 인식시키는 게 필요한데 홍보비가 2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이 시스템만 장착이 되면 제품에 나와 있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QR코드만 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 QR코드에 AI 워터마크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그걸 국내에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조폐공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걸 장착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위원** 국가적인 일자리, 기업의 피해 이런 걸 고려할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박홍근 장관님, 다른 나라에서 왜 추경을 지금 안 하나면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상충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을 안 하고 기존의 예산을 재배치한다든지 세금을 덜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관님의 방파제라는 그런 인식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방파제를 무조건 다 세워 가지고 화수분처럼 모든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세청장님, 추가 세수 올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하기 힘드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지난번에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측을 했던,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저는 혈액 은행에서 피를 뽑아서 국민에게 헌혈한다라는 생각으로 추경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간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거를 부득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최고가격제, 유류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돈을 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높여 가지고 세금을 덜 받으면 돈을 덜 받는 거지 돈을 더 쓰는 게 아니거든요.

총리님, 그래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총리님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대폭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정책이라는 건 다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대안 중의 하나라

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정책 이후에 또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후에 그다음 정책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사무실에서 총리님이 지난 국회 때 발의하신 법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탄력세율을 70%까지 낮출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까지 하셨는데 그때도 많은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무총리 김민석 유류세 면제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할 때 그때 제가 그 법을 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 ‘해경, 유가 60% 오르자 500억 예산 부족, 해상 순찰 줄인다’. 이거는 MBC 기사입니다, ‘허리띠 졸라 맨다, 해경도 고유가 직격탄’.

제가 해경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얘기가 맞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이나 해경 등의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추가 소요가 있다면 그건 목적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놨다, 그걸 통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안여객선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배준영 위원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류 보조금이 택시·버스 이런 데도 추경에 지원이 됐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웅진군이나 신안군, 울릉군에 사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 전쟁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동감하시고 좀 늘려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섬 주민이라고 별다른, 다른 어떤 피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여객선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선주에게 또 선사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 면세 혜택이 있지요. 이번에 또 석유, 경유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최고가 격제가 들어가지요. 거기에다가 주요 항로와 관련해서 보조금 증액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국 100개 항로 중에서 42개 항로에…… 지금 보조 항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총 100개 정도 중에 필요시 나머지를 좀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PPT 한번 띄운 게 있었는데 지난달에 미국 갔다 오신 것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1년 만에 혼자 처음 미국 가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리께서 가신 것은, 공식 방문이. 가시기 전에 쿠광이나 관세 문제나 앞으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보고도 받으셨을 것 같고 당연히 방미계획 같은 것 보고 다 올리고 협의를 하셨겠지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 후계자 문제, 경제 상황, 미국, 러시아나 중국 관계, 대화를 원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기존에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 여쭙다고 이걸 쭉 다시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카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를 보였고 검토해 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표현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어쨌든 특파원 간담회 때 하신 거 있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저게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을 드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계부처 간에 어느 정도 조율된, 논의가 된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원래 예정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략……

○김기웅 위원 줄여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셨나 아니면……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꼭 개인적 의견만은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전반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호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하고 있던 것을……

○김기웅 위원 아이디어를 드렸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관계부처와 협의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돈을 쓰진 않거든요. 누구랑 협상을 하든 자기가 선물을 주고 자기가 뭘 양보하면서 협상하진 않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 말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에게 ‘선물 보파리 하나를 내가 줄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저 아이디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딱 궁금한 것은, 나중에 드러날 텐데 만약에 저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거나 우리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저기 계실 때, 김정은 만났을 때 저 부분에서 흥미를 보였다는 것도 아시다시피 그런 걸 주지 않고 진전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라든가 옛날에 제네바 합의 94년에 했을 때 경수로 지원을 했던, 그 뒤에 6자 회담 할 때 중유 지원을 했던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미·북이 만났는데 우리가 상당한 부분의 재정을 들여서 같이해 주는, 물론 그 형식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궁금하신 걸 알겠고요. 저희의 재정이 들어가는 제안을 했거나 또는 예를 들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원칙이 훼손되는 워딩을 일부라도 썼거나 한 것이 전혀 없고, 미국과 북한 상호 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정확하게는 제가 언론에 그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고 조사를 하라고 했고 또 모종의 지시를 했다.

○김기웅 위원 글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김민석 예, 내부에서 관계 당국 간에 여러 가지 진단과 분석의 기초가 있던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드러날 텐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늘 옆에 있었던 건 아니고 늘 일정 부분 역할을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중에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이 늘 들어갔던 거고. 북한하고 상대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로만 해결돼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분명히 뭐가 가야 되는데 트럼프 자기 돈 들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그 돈을 들여서 선물 보따리를 주느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전혀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드러날 텐데, 지금 이걸 기록을 제가 정확하게 남기고 싶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전혀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우리 국가나 우리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을 질 얘기는 전혀 없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결과적으로도?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제가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러면 선거 유세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선거 유세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 그것이 튜닝제도가 돼 가지고 구조 검사가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승인이라는 게 직접 가 가지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다 검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선거 직전에 아마 집중적으로 그게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면 1만 대가량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1만 대가 선거 임박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오면 이것이 그 승인 절차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승인이 안 되면 이게 불법인 상태로 선거 유세 차량이 운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관심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와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삼자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 유세 차량에 대한 어떤 구조물에 대한 그런 원칙과 기준 또 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 승인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선관위하고 국토 부하고 아까 말씀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송기현 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보험이 잘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면 선거 기간 동안에 무보험인 상태로 이 차량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나 차주가 굉장히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보험을 안 받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절차를 좀 신속하게 만들어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또 하나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K-패스 부분에 대해 환급 확대를 포함한 추경안 877억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K-패스 관련된 이 추경안이 지금 정률형 환급률 인상 중심으로 설계돼 가지고 이게 정액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해당이 안 돼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기본형 정률로 돼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정률은 기존 이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데 신규로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에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정액제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자칫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기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6만 2000원 이상을 다 환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그 차이로 인해서 갈아타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최근에 3만 원 일괄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위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5부제 하거나 2부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새로 이것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이용할 부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률형 환급 그거 말고 정액형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연구하고 계시다니깐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뿐 아니라 새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송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끝으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행정안전부장관님!

안 계시나요? 이제 들어오시네.

시간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하위 70%와 관련해서는 너무 광범위한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 재난지원금 상황을 봤을 때 소비유발 효과가 한 20%에서 30%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20%, 30%라는 거는 지원금 100%로 났을 때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을 하면 120·30%가 추가가 됐다는……

○**임종득 위원** 실제로 20%에서 30%가 안 됩니다. 연구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자를 조사하는 데 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지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시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특히 복지부로부터……

○**임종득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5분밖에 없으니까……

이걸 현금 대신에 차라리 유가라든가 전기요금을 인하해 버리면 그거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인력도 필요 없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가지 않나,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금 전에 제가 밖에서 박형수 간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금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 예산의 예비비를 리터당 500, 우리 돈으로 한 4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돈을 쥐 가지고 물가를 부추기지 말고 아예 그냥 유류세라든가 전기세를 인하하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부담도 줄이고 물가상승 압력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임종득 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송미령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이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을 추경의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농지조사 예산을 588억, 이걸 좀 생똥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여다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농지이용관리지원에 139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4개월 만에 무려 4배에 달하는 588억 원을 지금 농지조사에다 넣고 있어요. 이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지조사 원래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지의 한 20ha 정도에 대해서 랜덤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임종득 위원** 전쟁 추경과 관련해서 이 시급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예. 일단은 새로운 인력 고용을 5000명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업의 가장 기본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도록……

○임종득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고용창출을 위해서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단순히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임종득 위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류비라든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무기질비료와 관련된 것 이게 훨씬 더 시급하고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찢끔찢끔 주면서……

이게 지금 들어간 이유가 지난 2월 24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으셨고요.

○임종득 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 볼까요?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께서요? 예.

○임종득 위원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농지는 매각명령 방안까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투기적 수요를 잡아내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박은식 예.

○임종득 위원 임업 분야에도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텐데 지금 임업 분야의 유가 상승에 관련된 면세유 지원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산림청장 박은식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임종득 위원 농업유도 지금 계속 반영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업 분야도 상당히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분야 자체가. 그래서 산림 관리라든가 산불 예방, 재해 대응 이쪽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만약에 정리가 잘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중동 상황으로 유가 부담이 확실히 늘어나서 피해 부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이소영 간사위원님과 박형수 간사위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녁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형두·배준영·김대식·김기웅·임종득·송기현·조계원·이훈기·안도걸·허성무·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또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우리 속기사들 그리고 의회경호과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

○출석 위원(47인)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우재준	윤후덕	이강일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성준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강승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교육부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정상용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정책기획관 이주열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하녕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임기근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0)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3)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4)

이상 4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5)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6)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7)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8)

이상 4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의견서 송부

4월 7일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가 송부됨

○통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9)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9)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2)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3)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4)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5)

이상 9건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